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元致庸

農村型 住民自治센터의 發展方案에
관한 研究

- 示範實施 地域인 楊洲郡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Farm Village Type
People's Autonomous Center**

- Focused on the Model Town Yangju-gun -

2001年 8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祉行政學科

社會福祉專攻

金 永 宰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元致庸

農村型 住民自治센터의 發展方案에
관한 研究

- 示範實施 地域인 楊洲郡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Farm Village Type People's
Autonomous Center

- Focused on the Model Town Yangju-gun -

위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8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祉行政學科

社會福祉專攻

金 永 宰

金永宰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1年 8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4
제 2 장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읍·면·동 기능전환의 필요성	5
1. 지방행정계층의 합리적 조정	6
2. 주민자치의 여건조성	7
3.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복지수요 충족	9
제 2 절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	11
1.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11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	13
3.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16
4.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16
제 3 절 주민자치센터의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19
1. 주민자치센터의 도입배경	19
2. 주민자치센터의 추진경과	20
제 4 절 주민자치센터의 국내·외 사례	24
1. 국내 사례	24
2. 외국 사례	29
제 3 장 조사 연구	36
제 1 절 조사의 개요	36
제 2 절 분석결과 및 해석	37
1. 인구통계학적 특성	37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재정	42
3.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참여	45
4.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49
제 3 절 양주군 주민자치센터의 현황과 문제점	54
제 4 장 농촌형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	59
제 1 절 농촌 주민의 참여를 위한 선행조건	59
1.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	60
2. 효율적인 민·관 협력 체제	62
제 2 절 농촌형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64
1. 주민자치위원회 인적구성의 다양화	64
2. 운영요원 (전담실무자와 자원봉사자)의 육성과 교육	65
3. 주민자치 환경조성과 재정의 확보	67
4. 민·관 협력과 주민자치센터간 네트워크 구축	67
제 5 장 결론	71
ABSTRACT	78
(부록 1) 설문지	81
(부록 2) 양주군의 현황	89
1. 회천읍	89
2. 양주읍	91
3. 은현면	91
4. 남면	93
5. 광적면	94
6. 백석면	94
7. 장흥면	95

- 표 목 차 -

<표 2-1> 단계별 주민자치센터의 성격	15
<표 2-2> 동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 실시 동의 선정현황	23
<표 2-3> 수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현황	26
<표 2-4> 수영구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 및 이용방법	27
<표 2-5> 외국의 사례분석	35
<표 3-1> 성별	37
<표 3-2> 연령	37
<표 3-3> 결혼여부	38
<표 3-4> 가족수	38
<표 3-5> 가족지위	38
<표 3-6> 주거지역	39
<표 3-7> 거주기간	39
<표 3-8> 주거형태	39
<표 3-9> 차량보유	40
<표 3-10> 월평균수입	40
<표 3-11> 학력	41
<표 3-12> 직업	41
<표 3-13>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42
<표 3-14>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42
<표 3-15>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	42
<표 3-16> 주민자치센터 시설	43
<표 3-17> 주민자치센터가 수행해야 할 기능	43
<표 3-18> 주민자치센터 기능	45
<표 3-19> 주민자치센터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 이유	45
<표 3-20> 면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 알게된 방법	46

<표 3-21>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주도적인 역할 담당자	46
<표 3-2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참여할 의향	47
<표 3-23> 컴퓨터교육 참여 여부	48
<표 3-24> 컴퓨터교육 불참 이유	48
<표 3-25> 주민자치센터 공간활용	49
<표 3-26> 문화생활 프로그램 운영시 중점을 두어야 할 계층	49
<표 3-27> 주민자치센터 활용 시간대	50
<표 3-28> 컴퓨터와 인터넷 필요정도	50
<표 3-29>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정도	51
<표 3-30> 컴퓨터와 인터넷 배울 의향	51
<표 3-31> 컴퓨터 보유상황	51
<표 3-32> 인터넷 접속 가능 여부	52
<표 3-33> 주민자치센터 내 인터넷 이용 의향	52
<표 3-34> 읍·면사무소를 지역정보화로 사용하는 방안	53
<표 3-35> 지역정보화 공간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	53
<표 2> 양주군 각 읍·면 현황 (2000. 12 현재)	92

- 그림 목차 -

<그림 3-1> 양주군 읍·면 주민자치센터 위치도	56
<그림 4-1> 농촌형 주민자치센터 모델	6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읍·면·동은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착된 일선행정기관으로서 종합행정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민선자치 출범 이후 자치 시·군·구 중심의 행정체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역할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으로의 변화를 꾀하고자 99년 3월 25일 국정개혁과제 추진계획 보고에서 동사무소 기능 전환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99년 6월부터 전국 94개 시·구 278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시범 실시한 후, 도시지역은 물론 농촌지역까지 읍·면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치제의 시행으로 자치단체에 요구되는 것이 지방화, 정보화, 국제화였는데, 특히 90년대에 들어 익숙해진 전자정부, 리스트럭처, 정보인프라, 기업·정부혁신 같은 용어들은 자치단체들에게 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한 전략으로 고려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특히 IMF경제위기를 거치면서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 구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정부는 주민의 행정참여와 주민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00년까지 도시지역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2001년까지는 농촌지역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¹⁾

1) 행정자치부,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 지침, 2000, 3. 6.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서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구체적 역할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민참여를 위한 정보인프라, 도로와 교통 등 기반시설들이 미흡하고,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이 존재하며 지리적인 면에서 주민참여과정 자체가 힘들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도시지역보다 낮기 때문이다.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을 도시지역보다 늦게 실시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특수성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운용사업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이 도시지역보다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농촌지역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각종 문화시설과 기존의 복지시설을 연계하여 기능을 분할하는 동시에 주민자치센터의 세부 지역별 특화사업을 지원·추진하는 복지공동체로 종합관리·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주민 참여의 장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농촌지역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그 중에서도 경기도 양주군을 실증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상호 연계 및 보완적인 관리·운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양주군의 경우, 2000년 5월 3일 군 전체 7개 읍·면이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되어 2000년 12월 7개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였다. 현재 양주군의 각 면들은 제각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연관 시

설들의 특성 또한 다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관리·운영에 있어 지역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규모,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주민자치센터의 모델을 개발하고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양주군 주민자치센터 7개 중 3개를 선정하여 운영자 측면에서 주민참여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계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참여자의 입장에서 주민참여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각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자를 선택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각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예비설문을 실시하여, 설문문항을 정리한 다음, 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용빈도와 실태, 이용 만족도, 주민참여 정도 및 애로 사항, 요구 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SPSS PC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처리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총론부분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의 범위,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였다. 제2장은 주민자치센터 관련 개념과 이론을 살펴보고, 외국의 선진사례 및 국내 사례 등 현황 분석 및 이론적인 검토를 행하였다. 제3장은 설문지를 통한 주민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분석·정리하며, 이를 토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안의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제4장은 이상의 내용들을 토대로 바람직한 농촌형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 부분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리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시범실시지역인 양주군 1개 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국내 모든 농촌에 적용할 수 있는 농촌형 모델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제도 자체가 시행 초기이므로 특히 농촌형 모델에 관한 선행 연구자료 및 결과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자료수집과 분석에 애로를 겪었으며 관련 자료 부족으로 인해 사례 분석과 비교에 무리가 있었다.

셋째, 보다 정교한 농촌형 모델 개발을 위해 설문지 구성에 있어 계량적 지표 측정을 위한 항목을 담으려고 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다.

넷째, 국내 현실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농촌형 주민자치센터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으로서 도시형 모델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관련 자료의 부족, 그리고 연구시간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제 2 장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읍·면·동 기능전환의 필요성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현 정부는 1998년 비효율적인 행정체계 축소를 발표했다. 특히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이 행정 업무의 전산화로 인해 상당히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읍·면·동 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논란 끝에 읍·면·동 사무소를 폐지하겠다는 원래의 방침에서 읍·면·동사무소를 축소·존속시킨 채, 그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후퇴하였다.

읍·면·동을 기능전환하려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²⁾, 첫째는 현재,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3~4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계층을 축소·조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한 수단으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현저하게 줄어든 최일선 행정계층인 읍·면·동의 사무 중에서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행정기능을 시·군·구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들어섬에 따라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하에서는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의 필요성³⁾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행정자치부,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2000.

3) 박 우,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 관련 운영방향 및 주요쟁점사항 해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 광주광역시 북구청, 1999.3.

1. 지방행정 계층의 합리적 조정

우리 나라의 지방행정 계층구조는 2개의 자치계층과 1~2개의 비자치 행정계층 등 모두 3~4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다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계층이 다단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시간이 지연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중간계층이 단순한 중계기능만을 수행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일선지방행정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선지방행정체제 개선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행정계층을 여러 단계로 나누게 되면, 행정구역의 범위가 좁아져서 주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쉽지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계층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정책실시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책수행이 어렵게 된다.

2) 기초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현재 기초자치단체와 주민 사이에는 행정구 - 동 혹은 읍·면·동 등 1개 혹은 2개의 행정계층이 있다. 이로 인하여 주민의 의사나 요구사항은 읍·면·동 혹은 행정구를 거쳐서 기초자치단체로 전달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또한,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의 관계가 읍·면·동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거나 왜곡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3) 단순한 행정중계기능의 탈피

지금까지의 읍·면·동은 상부계층의 지시나 명령을 단순하게 하부계층에 전달하는 중계기관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직접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2. 주민자치의 여건조성

95년 7월,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⁴⁾한 이후 우리 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는 과거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시대의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아니고 그 지방의 주인인 주민을 위한 주민중심의 민주적인 행정이 실시되어야 하고, 이 주민중심의 행정체제를 통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1) 주민중심의 행정체제 구축

주민중심의 행정은 고객중심의 행정, 고객지향행정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국민

4) 민선1기(95년 7월 1일~98년 6월 30일), 민선2기(98년 7월 1일~)

에 대한 배려와 봉사가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에는 지역주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다.

2) 지역중심의 커뮤니티의 형성

지역주민과 지역의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역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커뮤니티를 통해서만이 지역의 문화·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을 주민 스스로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⁵⁾.

커뮤니티란 지역을 기본적인 단위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일종의 근린집단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카테고리를 상정하고 그 안에서의 생활체계를 커뮤니티 요소로 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더불어 생활해 나가는 것을 커뮤니티의 요소로 보았다. 그러나, 1910년대부터 지역성과 공동성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가 붕괴됨에 따라서 매키버는 공동성 대신에 공동체의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커뮤니티에는 지역공동체의 토대가 되는 지역성과 공동체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여기서 지역성이라는 것은 ① 사회적 유사성, ② 공통된 사회적 표현, ③ 공통된 전통, ④ 공통된 습관, ⑤ 공속감 등을 말하는 것이고, 공동체의식이라는 것은 ① 우리의식(we-feel), ② 역할의식(role-feeling), ③ 의존의식

5) 박정호, "주민참여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dependent-feeling)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읍·면·동사무소를 기능전환한 주민자치 센터는 지역의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실시될 주민자치센터가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상을 그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경험을 우리로서는 가진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 영역인 동사무소의 기능 중 일부를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의식과 주체의식을 키우기 위한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한다는 구상을 정부가 제기하고 추진하는 것은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라는 원래의 구상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변화 자체는 긍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3.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복지수요 충족

1) 복지수요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 복지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즉, 사회복지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이다⁶⁾. 좁은 뜻의 사회복지란 아동·노인·장애자에 대하여 금전·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⁷⁾. 또 여기에 공적부조(公的扶助: 생활

6) 두산 세계 대백과 Encyber

곤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로 쓰는 경우가 있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에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 · 사회보장 · 주택보장 · 공중위생 · 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에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복지국가란 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에 의하여 얻어지는 국민소득총액의 증대를 바탕으로 조세정책, 일부 산업의 국유화, 완전고용, 쾌적한 의식주의 확보, 질병자 · 실업자 · 노인과 모자(母子)의 사회보장, 국민연금 등에 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2)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복지수요 충족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높은 농업종사자⁸⁾ 및 노령인구의 비율⁹⁾,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문제, 열악한 의료환경, 복지수요자들이 지리적으

7)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82), 사회복지사업법(92), 사회보장기본법(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8) 1960년 농가 인구는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였으나, 비농업 부문의 노동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농가 인구는 1967년 1600만명을 정점으로 연평균 40만명씩 감소하여 1980년에는 1,083만명, 1990년에는 666만명, 1995년 485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1980년 이후 농가 인구는 연간 4.7-6.1%씩 감소하였다. 농촌 인구의 감소에 따라 농업 취업자도 1975년에는 504만명, 1980년에는 443만명, 1995년에는 242만명 수준으로 연평균 3% 이상 감소하였다.

<http://www.namri.go.kr/html/연구현황/1-1.htm>

9) 중·소농의 위축에 따른 소득격차와 고령자 복지 및 통일을 대비한 농업협력 등 새로운 문세들이 대두되고 있다. 규모화된 전문경영체제가 증가되고 화훼·양돈 등 상업적 영농이 확대되면서 중·소농은 위축되고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3ha이상 쌀 재배농가 : ('80) 9 → ('90) 18 → ('98) 35천호

-2004년에는 60세이상 농업인구가 50%이상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milenium.pe.kr/>

로 산재해 있는 등 복지수요가 도시보다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상설기구의 지속적이고도 신속한 대응이 보다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해당 읍·면·동에 별도로 각종 기관·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등이 위치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되어 복지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주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

1.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현재 걸음마 수준에 있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뿌리에 해당되는 지역의 자생적 자치조직의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의 자생적 자치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직으로 현재의 읍·면·동 행정조직체계가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방행정조직은 주민들의 위한 주민중심의 민주적인 조직구조가 아니고 중앙의 하부조직으로 중앙의 경제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리지향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행정의 목표는 국가정책의 능률적인 수행이었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의 목표

가 설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민주화시대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점차 향상되어 가고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 감에 따라서 주민들의 관심사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도 주민의 문화적인 욕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안하고 즐겁게 여가를 즐기고 싶다는 욕구 등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기능전환을 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지금까지 각종 규제조치를 통한 인·허가, 증명, 신고 등의 사무와 국가시책 홍보, 지도·단속 등의 수단으로만 이용되던 읍·면·동을 비롯한 각종 행정기관이 앞으로는 주민의 교양수준 향상을 위한 시민대학 개설,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물가정보, 취업, 주식, 부동산 등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센터, 체육과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장소와 기회를 제공해 주는 문화체육시설,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여 주민이 부업에 나설 수 있게 해주는 부업교육시설 등을 통하여 주민중심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을 위한 행정기관으로 변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과 지역의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역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커뮤니티를 통해서만이 지역의 문화·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을 주민 스스로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커뮤니티적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¹⁰⁾.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의 커뮤니티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10) 박성수, 「지방자치의 이해」,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9, p.45.

의 명칭도 역시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즉, 주민자치센터는 같은 지역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이며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일들을 의논하는 주민자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나 기능은 그 지역의 특징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도 천편일률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징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궁안말 쉼터’, ‘산본문화센터’ 등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정하였고, 서울의 성동구는 ‘동민의 집’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결정한 것이 좋은 예라고 하겠다.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

우리 나라의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사회(Community)를 근거로 지역주민의 자치조직이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는 주민 혹은 주민자치조직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등 가능한 한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국가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전담하여 운영할 만한 주민자치조직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민

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민이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로 육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몇 가지 중간단계를 설정하고, 그 단계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주체의 성격을 규명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은 도입단계 - 정착단계 - 활성화단계 등 각 단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¹¹⁾.

첫째, 도입단계는 동의 사무와 인력조정을 통하여 시설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각종 법령을 개정하는 동시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조례나 운영규약을 제정하며, 운영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등 기본골격을 갖추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는 주민자치센터의 개소를 위한 사전준비(사무와 인력조정, 법령과 제도 정비 등)와 아울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실시단계 등을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확정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시범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한 후 대략 2년 ~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도입단계에서의 운영주체는 기초자치단체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대표도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인 읍·면·동장으로 하고, 각각의 프로그램에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관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정착단계는 관련 법령 정비가 완전히 끝나고, 읍·면·동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이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홍보가 끝난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는 주

11) 송병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광주광역시 북구청·참여자치21 정책토론회, 1999.3.

민자치센터가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단계이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이나 주민자치조직 등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착단계에서의 운영주체는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의 관·민협동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대표는 공무원이 담당하고 시설의 관리와 유지보수, 민원행정과 사회복지사무 등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배치될 것이고,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조직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셋째, 활성화단계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의 조직으로 완전히 정착시키는 단계를 말한다. 활성화단계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순수한 주민자치조직에 의해서 운영될 것이다. 각종 규제의 완화조치, 민원서류의 발급기관 확대 등과 아울러 적어도 2002년경에는 지방행정전산망이 완비될 전망이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담당하게 될 민원행정사무도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순수 민간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대표도 민간이 되고, 프로그램의 관리와 운영도 민간자치조직이 담당하는 체제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표 2-1> 단계별 주민자치센터의 성격

구 분	운영주체	프로그램 관리
도입단계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정착단계	민간 + 기초자치단체	민간자치조직
활성화단계	민간자치조직	민간자치조직

3.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동사무소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재원이나 인력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복지기능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동사무소의 규모와 인력자원 등을 고려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규모가 적거나 서로 인접해 있는 몇 개의동이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설정한 후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동사무소의 공간 이외에도 방과 후의 초등학교 교실이나 강당, 마을회관, 경로당 등도 부속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1) 문화의 집

문화의 집은 「문화사랑방」, 문화센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주로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들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여가생활이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된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단순히 관람만 하던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참여하고, 체험하고, 즐기는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문화의 집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시민대학(평생교육센터)을 들 수 있는데, 이 곳에서

는 각종 교양강좌, 어학교육,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감상하거나, 직접 시·소설, 음악, 미술 등의 창작활동, 연극공연 등에 참여하기도 하고 에어로빅, 스포츠 댄스 등 스포츠·레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공부방), 과외교실, 레크리에이션, 동아리방, 인터넷교실 등도 문화의 집의 기능에 속한다.

문화의 집에 여러 가지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에는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중앙 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의 집」 설치사업을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관리와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에 맡기고 문화관광부에서는 프로그램 지원, 설치재원 및 운영재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하여 관리·운영하고 교육부에서는 기술적인 지원과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

청소년관련부서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과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하고 관리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자치센터에 일임한다.

2) 시민사랑방

주민자치센터의 또 다른 기능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친목을 다지기도 하고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자치의 장으로서의 역할이다.

주민자치의 장이 될 시민사랑방의 주요한 기능으로는 취미서클의 모임장소, 동호인 연락사무소 등의 역할을 하는 동호인 모임의 장을 들 수 있다.

또한, 주민총회, 동회 등 각종 주민회의를 개최하는 장소인 마을사랑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요일별, 시간대 별로 구분하여 다른 모임과 겹치지 않게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공부방), 과외교실, 레크리에이션, 동아리방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3) 시민장터

시민장터는 지역주민들의 근검·절약을 통한 알뜰 생활을 실천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이웃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경제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시민장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농·어촌의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수산물 직거래장, 알뜰한 가정 살림을 돕는 중고물품 재활용과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한 중고물품 물물교환장 등으로의 활용, 지역주민들의 친목을 다지는 축제의 한마당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유산을 주민들이 함께 즐기면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지역축제, 향토문화제 등을 개최하는 장소,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사업을 위한 자선바자회장, 그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생산물품의 전시판매장, 지역의 특산품을 외부에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전시회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상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 단독으로 운영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관련 중앙부처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할 것

이다.

우선 농수산물직거래장의 개설을 위해서는 농수산부와 농협이 산지 농어민과 도시 주민들 사이의 자매결연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어민과 도시주민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지역의 중소기업제품의 홍보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중앙부처와 주민자치센터의 협조관계형성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결통로가 되어 전제적으로 주관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3 절 주민자치센터의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1. 주민자치센터의 도입배경

1910년 일제에 의해서 그 기본골격이 마련된 이래 80여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우리 나라 지방행정계층구조를 변화된 경제·사회적 환경에 맞게 개편·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이 실시된 이후, 지방의 자치권 강화, 각종 규제권 및 인·허가권의 지방이양 등으로 지방행정의 비중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져 가고 있다.¹²⁾ 이러한 상황 속에서 IMF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국가의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12) 정희천, "한국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12-17.

현재, 학계, 정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계층구조의 개혁방안은 3단계(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체제), 4단계(도 - 시 - 행정구 - 동 체제) 등의 다층적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3계층 혹은 4계층인 행정계층을 2계층으로 축소·조정한다는 것이다. 계층축소의 방안으로 시·도를 개편하는 방안, 시·군·구를 개편하는 방안, 읍·면·동을 개편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소 견해의 차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읍·면·동의 기능조정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2. 주민자치센터의 추진경과

행정자치부에서는 1997년 1월에 읍·면·동 개편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읍·면·동의 기능전환방안」에 관한 과제를 연구 의뢰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97년과 1998년 2년에 걸쳐서 연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999년 1월에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을 작성하였다.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1단계로 일반시와 자치구의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기능전환을 시도하고, 2단계로 도농복합시의 동과 읍·면에 대한 기능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1) 추진 과정

(1) 1단계 : 동 주민자치센터의 추진

1단계로 일반시와 자치구의 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동 주민자치센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걸쳐서 추진되었다.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평가	→	전면 실시
99. 7~12		99. 10~12		2000. 6

가) 시범사업 실시

본격적인 동 주민자치센터의 도입에 앞서서 실시되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시범사업은 다음의 단계를 걸쳐서 추진되었다.

① 준비단계(99. 1~6)

- 시·구와 동사이의 사무와 인력조정
- 자치법규, 조례, 지침 등의 정비
- 공간확보, 시설의 개·보수

② 시범사업 실시(99. 7~99. 12)

- 현행 법령의 범주 안에서 실시
- 현직 동장이 주민자치센터 소장 역할 수행
- 동 사무소의 여유공간에 문화복지시설 수용
-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나) 시범사업의 평가(99. 10~12)

능률성과 효과성의 평가기준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면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였다.

다) 전면 실시(2000. 6)

전면 실시는 시범실시와 마찬가지로 관계법령 등의 개정 → 사무와 인력조정 →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 → 운영위원회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의 순으로 추진되었다.

(2) 2단계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추진

1단계 동 주민자치센터 도입이 완료되어, 2000년 7월에 도농복합시의 동과 읍·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도입 작업이 추진되었다.

2) 추진 경과

동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 7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에 들어갔고 2001년 6월 현재 동 주민자치센터 도입이 추진되어온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범사업 대상 동의 선정 → 동의 사무와 인력 분석 → 사무와 인력의 재배치, 여유공간 확보 → 주민자치센터 개소 및 운영

(1) 시범사업 대상동의 선정

1단계 동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충남과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1,765개 동 중에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동은 278개

동이다. 이중 133개 동은 시·구의 전체 동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한 곳이고, 나머지 145개 동은 시·구의 일부 동만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동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2> 동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 실시 동의 선정현황 13)

시도	전체 동수	선정 동수		
		일부 동	전체 동	계
계	1,765동	145	133	278
서울	25구 530동	45	성동구(20)	65
부산	15구 234동	19	수영구(10), 사상구(14)	43
대구	7구 151동	10	동구(20)	30
인천	8구 128동	11	연수구(9)	19
광주	5구 97동	8	서구(13)	21
대전	5구 85동	7	유성구(6)	13
울산	4구 50동	3	중구(14)	17
경기	16시 303동	27	군포시(11), 의왕시(6)	44
강원	3시 44동	2	동해시(10)	12
충북	1시 28동	2		2
충남				
전북	1시 42동	4		4
전남	1시 26동	2		2
경북				
경남	1시 16동	2		2
제주	2시 31동	3		3

(2) 동의 사무와 인력 분석

행정자치부에서는 99년 3월부터 5월까지 278개 시범사업 실시 동 중 95개 동을 표본 동으로 선정하여 단위사무당 업무량과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단위사무 655건 중 29%에 해당하는 190여건의 사무를 존치시키고

13) 행정자치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전환」, 2000

나머지 465건의 사무는 시·구로 이관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력의 경우는 인구가 1만명 미만의 동은 6~7명의 공무원을 잔류시키고, 인구가 4만이 넘는 동은 10~11명의 공무원을 잔류시키도록 하였다.

(3)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상에서 실시한 사무와 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을 작성하여 각 시범사업 실시 동에 시달하였다. 이 조정지침을 참고로 하여 각각의 시범사업 실시 동에서는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동 자치센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9년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제 4 절 주민자치센터의 국내·외 사례

우리 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제도로는 일본의 사회교육기관인 「공민관」 제도와 자생적 주민자치조직인 「자치회」, 독일의 「공회당」 제도 등이 있으며, 문화적 성격이 보다 강한 제도로는 영국의 「지역예술센터」, 독일의 「사회문화센터」, 프랑스의 「센느내셔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들 선진사례를 검토¹⁴⁾하고 아울러 우리 나라의 사례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내 사례

국내사례로는 전체 동이 시범구로 지정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

14) 김정구, 행정기능의 전환과 주민참여 확대방안 (동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 교수 토론집) 참조.

연수구와 대구 동구, 부산 수영구, 서울 성동구 등을 대상으로 검토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게 될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각 동마다 공통적으로 설치하게되는 주요시설로는 안내데스크, 인터넷 및 CD부스, 비디오부스, 휴게공간 등이며, 동사무소의 공간 및 주민수요 등을 감안하여 미니공부방, 문화사랑방, 주민대화방, 다목적 공간, A/V감상실, 체력단련실, 댄스연습실, 유아놀이방, 정보자료실, 간이도서관, 한문서당, 바둑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대구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터넷, 사랑방, 봉사품앗이, 문화의집, 컴퓨터교실, 종합정보 열람실, 주민사랑방, 취미교실, 생활체육교실 등을 대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 설치에 구청이 나머지 사업은 동에서 집행하고 있다.

부산시 수영구의 경우 단체시설과 개별시설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체시설로는 다용도실, 문화동아리방, 비디오방, 각종 취미교실, 강좌개설, 비디오방 등이며, 개별시설로는 오픈 룸, 인터넷, 음악감상실, 만남의 장소, 정보열람, 휴게공간 등이었다. 대여방은 열람대 등을 비치하고 CD, 비디오 테이프, 도서 등의 열람 및 대여서비스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 동아리방은 취미·창작교실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한편 동호인 모임 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보열람 및 휴게공간에서는 각종 자료의 자유 열람 및 휴게·좌담의 장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남의 장소는 만남 및 대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 부스와 음악감상실에서는 인터넷정보망의 이용, 정보·자료의 검색 및 CD플레이어를 이용한 음악감상 활동 등이 이루어진다. 비디오방의 경우 비디오를 통한 영상물의 시청 등 이루어지며, 오픈-룸은 개인학습 및 독서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다용도실은 소규모 모임, 교육, 교양강좌, 소규모 다기능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목적 공간에서는 영화감상이나

15) 행정자치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추진 지방자치단체 수범사례집, 2000,10.

소규모 공연, 회의·교육·토론회장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래 <표 2-3>과 같이 대분류 될 수 있다.

<표 2 3> 수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현황

구분	내용
취미·교양	수족침, 단학, 서예, 관상어기르기, 요가, 명상, 노래교실, 건강교실, 올바른 자녀지도법
상식	전기관련 상식, 일어강좌, 미술강좌, 컴퓨터 기초학습, 생활영어, 생활철학, 역사학 강좌
기능훈련	수화교실, 종이꽃 접기, 꽃꽂이 교실, 사군자 강좌, 십자수, 퀼트

자료 :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추진 지방자치단체 수범사례집, 2000.10.

특히 취미나 교양강좌의 지도 등을 위한 전문분야의 자원봉사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각종 관련단체나 지역내 전문학원 등의 협조를 통해 강사의 발굴에 힘쓰는 한편, 주민자치센터간 인력의 통합관리 등을 통해 교류 봉사를 실시함으로써 관리자 및 강사의 부족을 해결하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의 릴레이식 파트타임세를 구축하여 봉사할 시간이 많지 않은 현대인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주민자치센터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다. 또한 자원봉사는 경제적 보상에 의해 동기부여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자의 부문별 모임 주선 및 각종 문화행사의 우선 초대, 자원봉사자 축제 및 우수봉사자의 시상 및 자녀 장학금 지급, 봉사유형에 따라 간식비 및 중식의 제공 등을 통해 봉사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가고 있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평일 일과시간인 경우는 전담공무원과 자원봉사자 2-4명의 보조로 이루어지며, 일요일이나 일과시간 후에는 당직근무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개방시간은 평일에는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일요일에는 10시부터 6시까지이다. 다만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방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 규정 등을 만들어 이용절차, 이용제한, 자료 및 시설물 훼손이나 분실에 따른 변상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의 주민자치센터 주요시설 운영 및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2-4> 수영구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 및 이용방법

구분	세부운영내용	정원	이용방법	비고
안내데스크			이용자기록부작성	
대여방(열람대)	CD, 도서, 비디오테잎 열람 및 대여		당일신청(대장기록)	
문화동아리방 (취미·창작교실)	취미·창작교실 프로그램 운영, 동호인 모임공간	15	사전예약(1회2시간)	요일별 프로그램 운영
정보열람 및 휴게공간	각종 자료 자유열람 및 휴게·좌담	4-6	자유이용	
만남의 장소	만남 및 대기공간	3-4	자유이용	
인터넷부스 및 음악감상실	인터넷망을 이용한 정보·자료검색, 음악감상	6	당일신청(1회 1시간)	
비디오방	비디오를 통한 영상물 시청	5	당일신청(1회 1프로)	
오픈 룸	개인학습 및 독서공간	16	당일신청(제한없음)	
다용도실	소규모 모임, 교육, 교양강좌, 소규모 다기능 공간	20	사전예약(1회 2시간)	
다목적 공간	영화감상, 소규모 공연, 회의·교육·토론회장, 다기능 복합공간	40-50		
기타	자체사업 선정 추진			

자료: 참여자치 21 주민자치센터 관련 세미나, <http://www.kcm.or.kr>

서울 성동구의 경우 전체 20개 동의 동사무소 시설을 개조하여 2000년 9월에 개소한 상태이다. 총 40억원(국비 10억, 시비 3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20개 전 동사무소의 1층은 동민원실로, 2-3층은 동민의 집으로 전면 개조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전문가의 설계에 따라 내부 장식은 최신식 인테리어로 장식하였고, 기본적으로 대형멀티비전 1대, CD기 2대, 인터넷 PC 5대 및 기능성이 좋은 이동용 탁자 및 의자 등을 비치하고 있다. 성동구의 경우 동별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관내의 주민 및 단체들이 유치원 멀티미디어 상영, 단전호흡, 회의, 인터넷 이용, CD청취 등 주민편의 위주의 시설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놀이공간이 설치되어 있어 비교적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동민의 집 운영프로그램은 동별로 평균 7-8개의 사업(부록 : 성동구 동민의 집 운영 프로그램 현황 참조)에 이르고 있었는데 단위사업별로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단위사업별로 3-5명의 '시간제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을 자원봉사자화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각 프로그램마다 참여주민 동아리회, 친목회 등을 구성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특수 프로그램은 강사료의 지원(대상 프로그램 : 서예교실, 우리가락교실, 건강체조교실, 에어로빅, 고전무용, 풍물놀이, 국선도, 어린이미술, 단전호흡, 주부가요교실, 주부메이크업, 건강맛사지, 제과·제빵교실, 차밍디스크, 꽃꽂이교실, 이·미용 및 메이크업) 등을 통해 전문강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일반 프로그램의 경우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성동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자율참여 확대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상과 같은 전문강사료의 지원 외에도 시설의 운영·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강사료, 동민의 집 사업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의 자율참여 동기 부여를 위한 프로그램별 동간(洞間)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성동구의 경우 행정은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의 확보에 노력하고,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간에 동아리를 구성케 하는 등 유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동민의 집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운영일지를 작성하는 정도의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 주민의 자발성에 의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시범동을 지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대상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 비상6동의 경우 헬스장, 탁구장, 농악교실, 바둑교실, 주민사랑방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 남포동의 경우 위탁운영에 의한 어린이집, 동의 직접 운영에 의한 체력센터, 예식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용지동의 경우 위탁운영에 의한 도서관(사회단체 위탁), 상설교양강좌(예총 임대), 어린이집(창원대 보육센터 위탁), 식당, 커피숍 등과 동의 직접 운영에 의한 예식장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외국사례

1) 일본의 공민관과 자치회 제도

(1) 공민관 제도

공민관은 지역을 기반으로하여 주민이 모여, 배우고, 상호 교류하는 장으로,

교양, 문화, 체육 등을 통하여 주민의 자치능력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종합적인 사회교육시설이다. 이는 1949년 문부성의 주도로 공식 출범하였는데, 일본의 교육기본법과 사회교육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실상 일본 사회교육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¹⁶⁾.

일본의 공민관은 설립이래 이제까지 사회의 발전에 따라 그 기능 및 역할을 달리하여 발전해 왔다. 공민관의 발전과정에 대한 시기 구분은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제시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창설기(1946-1949), 보급기(1949-1959), 정비기(1959-1971), 신장기(1971-1980), 변혁기(1980-현재)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공민관의 역할 및 기능의 변화과정과 거의 일치한다. 즉 창설기에는 종합서비스센터 기능, 보급기에는 사회교육센터 기능, 정비기에는 사회교육기간시설기능, 신장기에는 평생교육 및 커뮤니티센터기능 등을 수행하여 왔다.

공민관의 설치대상지역은 시(市)의 경우 중학교 통학구역, 정촌(町村)의 경우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설치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인구밀도,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중학교의 통학구역보다 좁게 설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공민관 조직은 관장과 주사 및 기타 직원으로 구성되며, 시정촌 교육위원회 사무국의 통제를 받는다.

공민관은 주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공민관 운영심의회를 통하여 운영되며, 심의회는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 위원 중에는 관내 학교장, 구장, 자치회 대표, 사회복지협의

16) 김석배,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효율화 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87

회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고, 관장의 임명, 운영, 기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공민관의 재원은 시설의 사용료, 단체회원의 회비, 국가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자치회(町會, 町內會) 제도

자치회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자치적 친목조직이며 임의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법인격을 지닌 「인가지역단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회관 등 상당한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치회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¹⁷⁾.

원칙적으로 가입은 자유로우며 거주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자치회에 가입할 수도 있으며, 대개는 의무적으로 가입함으로써 현재 전국민의 90% 이상이 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다. 임원은 회장, 회계, 감사, 간사 등으로 구성되며, 무보수·명예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회장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자원봉사적 성격을 지니고 활동한다. 자치회는 주민자치조직과 기초자치단체 등의 행정보조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부서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2) 독일의 공회당제도와 사회문화센터

(1) 「공회당」 제도

17) 김석배, 상계논문.

독일 공회당은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어 일선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1973년 전국적으로 단행된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정에서 탄생하였으나 법적인 기초자치단체는 아니다. 장소는 과거 게마인데(Gemeinde)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을 사용하며, 조직은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한 대표자와 지역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공회당 대표는 그 지역의 명망가이며, 낮에 행정업무를 수행해도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만한 사람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 간혹 그 지역 출신인 통합 지방의회의 의원이 공회당 대표를 겸하는 경우도 있다¹⁸⁾.

공회당의 기능은 행정과 민원관련 서비스 제공기능, 시민대학기능, 지역내 스포츠 단체, 취미단체, 로터리클럽 등의 지역단체가 중심이 되는 각종 문화 행사기능, 주민자치기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회당의 재원은 자체재원과 시정부의 지원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재원은 시민대학의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찬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정부의 지원재원은 공회당이 실시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을 시에 요구하면 시공무원을 파견하여 지원하는 형식을 취한다.

(2) 사회문화센터

독일의 사회문화센터는 70년대와 80년대 초에 사회문화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으로 활성화되었다. 이는 자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기존문화에 맞서 대안문화를 창조하는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사회문화센터는 재정문제로 폐쇄되는 사례도 많지만, 대부분 동호인 집단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

18) 김석배, 전개논문.

으며 최근에는 동호인 집단과 유한회사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한 복지단체가 이를 주도하는 사례도 있다.

사회문화센터는 단순히 문화와 예술행사만이 아니라 문화 간이주점, 문화카페, 혹은 공작실과 같은 다양한 형식을 지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간의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 고유한 창조행위를 유도한다. 사회문화센터의 재정은 주로 기부나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3) 영국 「지역예술센터」

예술센터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설립되기 시작하여 그 동안 지역사회의 중요한 예술공간으로 발전하여 왔는데, 현재 영국 전체의 예술공급 네트워크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변화와 지역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¹⁹⁾.

우선 예술센터는 커뮤니티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청중과 예술조직간의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들의 기존 취향을 개발하도록 하며,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예술 이벤트에 참여하고 그들 자신들의 창의성 개발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전문예술가들과의 만남 및 공동작업 기회를 제공하고, 아마추어 작업과 참여적 워크숍을 지원하고 있다. 예술가 차원에서는 예술센터가 예술가들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예술가들에게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한다²⁰⁾.

19) 권순복, 커뮤니티 시설이론(Ⅲ), 자치행정 137호, 1999, pp. 23~27

20) 김석배, 전개논문.

예술센터의 75%는 독립된 센터이며, 25%는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근무인원의 2/3 정도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1주일에 평균 5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활동분야는 회계, 홍보, 프로그램 및 예술자문, 강사, 카페운영, 자원조달, 프론트 및 리셉션, 사무 등의 업무이다.

4) 프랑스의 「센느내셔널」

프랑스의 센느내셔널은 지역단위의 공공문화시설들을 일컫는 말이다. 여기에는 연극, 무용, 음악 등 보다 역동적이고 현장감 있는 예술무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현재 센느내셔널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공공문화시설은 61개로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센느내셔널의 시설은 대부분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영리협회 형태로 운영된다. 센느내셔널은 협회 조직이기 때문에 협회에 관한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문화시설들은 ‘센느내셔널협회’라는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 문화조직체는 민간부분의 융통성, 자율성, 창의성을 활용하여 공공부분의 비능률성과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재정구조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27%, 지방 51%, 자체수입 22% 정도이며, 센느내셔널에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시설과 장소를 시는 센느내셔널에 무료로 제공하고, 장소의 사용방식에 대하여는 협약을 맺어 운영한다. 센느내셔널의 관장은 문화시설 경영의 책임자로서 임기는 3년이며, 엄격한 심사와 공개채용방식에 의해 선정되는데, 주로 문화예술 전문가들이다²¹⁾.

21) 권순복, 전개서

<표 2-5> 외국의 사례분석

구분	독 일 형	일 본 형	
		커뮤니티센터	자치회
중심시설	공 회 당	공 민 관	자치회관(공민관을 위탁받아 사용하기도 함)
성격	임의조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사회교육기관	주민자치조직
관리운영주체	- 특별한 조직없음 - 지역의 자원봉사자, 청년회, 스포츠클럽 회원 등이 자주적으로 관리·운영	공립공민관, 사설공민관 (현재 공립공민관의 90%이상을 민간위탁)	자율적 주민조직 (선거로 임원진 선출, 별도의 사업부서도 있음)
관할구역	인구 500명 - 2만명 사이의 법인격이 없는 일선 지방조직단위	기초자치단체 당 6-7개	자생 부락 단위
형성과정	1973년 행정구역개편의 일환으로 정부가 계획적으로 추진	사회교육기관으로 정부가 계획적으로 육성	주민의 자치적 친목 조직으로 성장
기능	시민대학, 주민집회소, 청소년센터, 도서관, 박물관, 문화행사장, 재활용센터 등	시민교육장, 레크레이션·체육장, 자치조직사무소 등	지역자치사무처리,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처리
재원	사용료·수수료, 자치단체 지원금 등	정부보조금, 회비, 사용료·수수료, 수익사업등	정부보조금, 회비, 사용료·수수료, 수익사업, 수탁·용역비 등
기타	대표자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역할 혹은 단체장의자문 역할 수행	상근직원 있음	상근직원 없음(자원봉사자 활용)

자료: 김찬호, 일본마을 만들기의 전개와 의미, <http://miritel.co.kr/~dorandow/festival/guest/japan-town.htm>

제 3 장 조사 연구

제 1 절 조사의 개요

본 조사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목적 하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양주군 7개 읍·면 주민들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2001년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총 198부를 수거하였으며 실제 분석에 사용된 설문은 181부이다.

설문 문항 구성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재정에 관한 질문 6개 문항, 주민자치센터의 주민 참여에 관한 질문 6개 문항,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관한 문항 10개 문항,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한 10개 문항 총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설문결과는 SPSS/PC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촌형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분석결과 및 해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에서는 남자 120명 66.3%, 여자 61명 33.7%를 나타내었다.

<표 3-1>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남자	120	66.3	66.3	66.3
	여자	61	33.7	33.7	100.0
	계	181	100.0	100.0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가 69명 3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0대 43명 23.8%, 20대가 24명 13.3%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연령

		빈도	퍼센트	Valid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10대	16	8.8	8.9	8.9
	20대	24	13.3	13.3	22.2
	30대	69	38.1	38.3	60.6
	40대	43	23.8	23.9	84.4
	50대	18	9.9	10.0	94.4
	60대	10	5.5	5.6	100.0
	소계	180	99.4	100.0	
Missing	System	1	.6		
계		181	100.0		

<표 3-3> 결혼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기혼	137	75.7	76.1	76.1
	미혼	43	23.8	23.9	100.0
	소계	180	99.4	100.0	
Missing	System	1	.6		
계		181	100.0		

결혼 여부에서는 기혼이 137명 75.7%, 미혼이 43명 23.8%로 나타났다.

<표 3 4> 가족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1인	5	2.8	2.8	2.8
	2인	19	10.5	10.5	13.3
	3-4인	122	67.4	67.4	80.7
	5인이상	35	19.3	19.3	100.0
	계	181	100.0	100.0	

가족수에서는 3 4명인 가족이 122명 67.4%로 가장 많았고, 5인 이상이 35명 19.3%, 2인이 19명 10.5%를 나타내었다.

<표 3-5> 가족지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세대주	93	51.4	51.7	51.7
	주부	44	24.3	24.4	76.1
	세대주이면서주부	1	.6	.6	76.7
	기타	42	23.2	23.3	100.0
	소계	180	99.4	100.0	
Missing	System	1	.6		
계		181	100.0		

가족 지위에서는 세대주가 93명 51.4%로 가장 많았고, 주부가 44명 24.3%, 기타 42명 23.2%순으로 나타났다.

<표 3-6> 주거지역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남면	9	5.0	5.2	5.2
	은현면	13	7.2	7.5	12.6
	광적면	39	21.5	22.4	35.1
	회천읍	42	23.2	24.1	59.2
	백석면	14	7.7	8.0	67.2
	양주읍	51	28.2	29.3	96.6
	장흥면	6	3.3	3.4	100.0
	소계	174	96.1	100.0	
Missing	System	7	3.9		
계		181	100.0		

주거지역은 양주읍이 51명 28.2%로 가장 많았고 회천읍 43명 23.2%, 광적면 39명 21.5%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거주기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1년 이내	10	5.5	5.5	5.5
	1-5년	66	36.5	36.5	42.0
	5-10년	35	19.3	19.3	61.3
	10년 이상	70	38.7	38.7	100.0
	계	181	100.0	100.0	

거주기간에서는 10년 이상인 사람이 70명 38.7%, 1-5년이 66명 36.5%, 5-10년이 35명 19.3%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주거형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개인주택	90	49.7	51.7	51.7
	아파트	62	34.3	35.6	87.4
	연립주택	15	8.3	8.6	96.0
	다세대	2	1.1	1.1	97.1
	기타	5	2.8	2.9	100.0
	소계	174	96.1	100.0	
Missing	System	7	3.9		
계		181	100.0		

주거형태에서는 개인주택이 90명 49.7%, 아파트가 62명 34.3%, 연립주택이 15명 8.3%순으로 나타났다.

<표 3-9> 차량보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없음	43	23.8	24.7	24.7
	있음	131	72.4	75.3	100.0
	소계	174	96.1	100.0	
Missing	System	7	3.9		
계		181	100.0		

차량이 있는 사람이 131명 72.4%, 없는 사람이 43명 23.8%를 나타내었다.

<표 3-10> 월평균 수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99만원이하	10	5.5	6.8	6.8
	100-149만원	35	19.3	23.8	30.6
	150-199만원	54	29.8	36.7	67.3
	200-299만원	35	19.3	23.8	91.2
	300만원이상	13	7.2	8.8	100.0
	소계	147	81.2	100.0	
Missing	System	34	18.8		
계		181	100.0		

월평균수입에서는 150·199만원이 54명 29.8%로 가장 많았고, 100·149만원과 200·299만원이 각각 35명 19.3%를 나타내었다.

<표 3-11> 학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초등졸업이하	18	9.9	10.2	10.2
	중졸	34	18.8	19.2	29.4
	고졸	91	50.3	51.4	80.8
	대학생	6	3.3	3.4	84.2
	대졸	28	15.5	15.8	100.0
	소계	177	97.8	100.0	
Missing	System	4	2.2		
계		181	100.0		

학력에서는 고졸이 91명 50.3%로 가장 많았고, 중졸이 34명 18.8%, 대졸이 28명 15.5%를 나타내었다.

<표 3-12> 직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관리/사무직	19	10.5	10.7	10.7
	판매/서비스직	32	17.7	18.1	28.8
	생산직	18	9.9	10.2	39.0
	교사/교수직	3	1.7	1.7	40.7
	공무원	16	8.8	9.0	49.7
	농업	28	15.5	15.8	65.5
	기타	61	33.7	34.5	100.0
	소계	177	97.8	100.0	
Missing	System	4	2.2		
계		181	100.0		

직업에서는 기타가 61명 33.7%, 판매/서비스직이 32명 17.7%, 농업이 28명 15.5%, 생산직이 18명 9.9% 순으로 나타났다.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재정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질문에는 조금 알고 있다가 76명 42%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가 62명 34.3%, 아주 잘 알고 있다가 31명 17.1%, 알고있지 않다가 12명 6.6%로 나타났다.

<표 3-13>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아주 잘 알고 있다	31	17.1	17.1	17.1
	조금 알고 있다	76	42.0	42.0	59.1
	보통이다	62	34.3	34.3	93.4
	알고 있지 않다	12	6.6	6.6	100.0
	계	181	100.0	100.0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질문에는 반반이다가 80명 44.2%, 약간 도움이 되고 있다가 74명 40.9%,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가 19명 10.5%, 도움이 안되고 있다가 8명 4.4%를 나타내었다.

<표 3-14>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19	10.5	10.5	10.5
	약간 도움이 되고 있다	74	40.9	40.9	51.4
	반반이다	80	44.2	44.2	95.6
	도움이 안되고 있다	8	4.4	4.4	100.0
	계	181	100.0	100.0	

<표 3-15>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무료로 해야 한다	106	58.6	58.6	58.6
	재료비만 받아야 한다	66	36.5	36.5	95.0
	수강료, 재료비를 모두 받아야 한다	9	5.0	5.0	100.0
	계	181	100.0	100.0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수강료에 대해 무료로 해야 한다가 106명 58.6%로 가장 많았고, 재료비만 받아야 한다가 66명 36.5%로 나타났다.

<표 3-16> 주민자치센터 시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아주 만족한다	4	2.2	2.2	2.2
	대체로 만족한다	74	40.9	40.9	43.1
	그저 그렇다	90	49.7	49.7	92.8
	만족하지 못한다	13	7.2	7.2	100.0
	계	181	100.0	100.0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가 90명 49.7%, 대체로 만족한다가 74명 40.9%, 만족하지 못한다가 13명 7.2%, 아주 만족한다가 4명 2.2%로 나타났다.

<표 3 17> 주민자치센터가 수행해야 할 기능

구분	보기	선택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주민편의 영역	1.창업교실 운영	34	18.8	5	2.8
	2.지역 특산품 개발	37	20.4	19	10.5
	3.각종단체모임 및 주민회의장	23	12.7	17	9.4
	4.에스자장	31	17.1	21	11.6
	5.중고거래교환	13	7.2	23	12.7
	6.농산물직거래	26	14.4	53	29.3
	7.농·축산업, 임·수산업 관련 정보	3	1.7	25	13.8
	8.민원상담	11	6.1	15	8.3
생활정보 서비스 영역	1.각종 여행정보	38	21.0	30	16.6
	2.교통예약	16	8.8	45	24.9
	3.물가 및 주식 등 경제정보	32	17.7	15	8.3
	4.노동 및 고용정보	65	35.9	43	23.8
	5.농업정보교환, 영농상담	27	14.9	45	24.9
복지시설 영역	1.생활보호	59	32.6	15	8.3
	2.아동복지	58	32.0	29	16.0
	3.노인복지	26	14.4	42	23.2
	4.장애아동교육 및 치료실	19	10.5	39	21.5
	5.탁아실	16	8.8	53	29.3
문화·여가활동 및 평생교육 영역	1.각종 동호회 활동	60	33.1	21	11.6
	2.레크레이션	32	17.7	34	18.8
	3.어학강좌	28	15.5	13	7.2
	4.법률강좌	33	18.2	27	14.9
	5.공부방	22	12.2	29	16.0
	6.보충 수업	0	0	7	3.9
	7.영화·음악감상실	3	1.7	47	26.0
행정서비스 영역	1.제증명발급	84	46.4	37	20.4
	2.전·출입신고	18	9.9	25	13.8
	3.예비군입부	3	1.7	2	1.1
	4.민원업무	49	27.1	62	34.3
	5.재난·재해 관련 업무 등	22	12.2	50	27.6

기존의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경우, 대체로 5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기능별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2개를 선택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편의 영역에서의 첫 번째 순위로는 지역 특산품 개발이 37명 20.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창업교실 운영이 34명 18.8%, 음식점이 31명 17.1%, 농산물 직거래가 26명 14.4%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순위로는 농산물 직거래가 53명 29.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농·축산업, 임·수산업 관련정보가 25명 13.8%로 나타났다.

생활정보 서비스 영역에서의 첫 번째 순위로는 노동 및 고용정보가 65명 3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각종 여행정보가 38명 21.0%로 나타났다. 두 번째 순위로는 교통예약이 45명 24.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농업정보 교환, 영농상담이 44명 24.3%로 나타났다.

복지시설 영역에서의 첫 번째 순위에서는 생활보호가 59명 32.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아동복지가 58명 32.0%로 나타났다. 두 번째 순위에서는 탁아실 운영이 52명 28.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노인복지가 42명 23.2%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및 평생교육 영역에서의 첫 번째 순위에서는 각종 동호회 활동이 60명 33.1%로 가장 높았고, 레크레이션이 32명 17.7%로 나타났다. 두 번째 순위에서는 영화·음악감상실이 47명 26.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레크레이션이 34명 18.8%로 나타났다.

행정서비스 영역에서의 첫 번째 순위에서는 제증명발급이 84명 46.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민원업무가 49명 27.1%로 나타났다. 두 번째 순위로는 민원업무가 62명 34.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재난·재해 관련 업무가 50명 27.6%로 나타났다.

<표 3-18> 주민자치센터 기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주민편의 제공	61	33.7	33.7	33.7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29	16.0	16.0	49.7
	복지시설 제공	30	16.6	16.6	66.3
	문화·여가활동 및 평생교육제공	44	24.3	24.3	90.6
	행정서비스	17	9.4	9.4	100.0
	계	181	100.0	100.0	

주민자치센터가 수행해야 할 5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은 무엇인가에서는 주민편의제공이 61명 33.7%로 가장 많았고, 문화·여가활동 및 평생교육 제공이 44명 24.3%, 복지시설 제공이 30명 16.6%, 생활정보 서비스제공이 29명 16.6%, 행정서비스가 17명 9.4%로 나타났다.

3.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참여

주민자치센터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무료이거나 비용이 저렴해서가 53명 29.3%로 가장 많았고, 시설 또는 프로그램이 일상생활에 유용해서가 45명 24.9%, 여가선용을 위해서가 47명 26.0%, 민원업무로 면사무소 방문 시 이용할 수 있어서가 32명 17.7%, 취업 등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3명 1.7%를 나타냈다.

<표 3-19> 주민자치센터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시설 또는 프로그램이 일상생활에 유용해서	45	24.9	24.9	24.9
	무료이거나 비용이 저렴해서	53	29.3	29.3	54.1
	여가선용을 위해서	47	26.0	26.0	80.1
	민원업무로 면사무소 방문시 이용할 수 있어서	32	17.7	17.7	97.8
	취업등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	1.7	1.7	99.4
	기타	1	.6	.6	100.0
	계	181	100.0	100.0	

<표 3-20> 면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 알게된 방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언론, 마스크를 통해서	8	4.4	4.4	4.4
	군청, 면사무소의 홍보 전단지를 통해서	58	32.0	32.0	36.5
	반상회를 통해서	1	.6	.6	37.0
	면사무소를 방문하고 나서	73	40.3	40.3	77.3
	이웃 주민들에게 들어서	41	22.7	22.7	100.0
	계	181	100.0	100.0	

면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해 처음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면사무소를 방문하고 나서가 73명 40.3%, 로 가장 많았고, 군청, 면사무소의 홍보 전단지를 통해서가 58명 32.0%, 이웃 주민들에게 들어서가 41명 22.7%, 언론 마스크를 통해서가 8명 4.4%, 반상회를 통해서가 1명 0.6%로 나타났다.

<표 3-21>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주도적인 역할 담당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공무원	18	9.9	9.9	9.9
	주민자치단체	85	47.0	47.0	56.9
	전문경영인	22	12.2	12.2	69.1
	공무원과 주민자치단체의 연합체	56	30.9	30.9	100.0
	계	181	100.0	100.0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주민자치단체가 85명 47.0%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과 주민자치단체의 연합체가 56명 30.9%, 전문경영인이 22명 12.2%, 공무원이 18명 9.9%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냐는 질문에 먼저, 민편익영역에서는 반반이다가 71명 39.2%, 참여할 생각이 높다가 57명 31.5%, 참여할 생

각이 별로 없다가 33명 18.2%, 반드시 참여하겠다가 14명 7.7%,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가 3명 1.7%로 나타났다.

생활정보 서비스 영역에서는 반반이다가 64명 35.4%, 참여할 생각이 높다가 69명 38.1%, 반드시 참여하겠다가 13명 7.2%,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가 4명 2.2%를 나타내었다.

복지시설 영역에서는 참여할 생각이 높다가 63명 34.8%, 반반이다가 61명 33.7%, 반드시 참여하겠다가 29명 16.0%, 참여할 생각이 없다가 5명 2.8%를 나타내었다.

문화, 여가 활동 및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참여할 생각이 높다가 75명 41.4%, 반드시 참여하겠다가 50명 27.6%, 반반이다가 41명 22.7%, 참여할 생각이 없다가 4명 2.2%를 나타내었다.

행정서비스 영역에서는 반반이다가 73명 40.3%, 참여할 생각이 별로 없다가 43명 23.8%, 참여할 생각이 높다가 37명 20.4%, 반드시 참여하겠다가 14명 7.7%,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가 10명 5.5%로 나타났다.

<표 3-2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참여할 의향

	반드시 참여하겠다		참여할 생각이 높다		반반이다		참여할 생각이 별로 없다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민편의 영역	14	7.7	57	31.5	71	39.2	33	18.2	3	1.7
생활정보 서비스 영역	13	7.2	69	38.1	64	35.4	28	15.5	4	2.2
복지시설 영역	29	16.0	63	34.8	61	33.7	20	11.0	5	2.8
문화, 여가활동 및 평생교육영역	50	27.6	75	41.4	41	22.7	8	4.4	4	2.2
행정서비스 영역	14	7.7	37	20.4	73	40.3	43	23.8	10	5.5

<표 3-23> 컴퓨터교육 참여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예	96	53.0	53.3	53.3
	아니오	83	45.9	46.1	99.4
	3.00	1	.6	.6	100.0
	소계	180	99.4	100.0	
Missing	System	1	.6		
계		181	100.0		

만약 읍·면사무소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서는 참여하겠다고 96명 53.0%, 참여하지 않겠다고 84명 46.5%로 나타났다.

컴퓨터 교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시간이 없다가 40명 22.1%, 필요성을 못 느낀다가 35명 19.3%,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른다가 18명 9.9%,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아서가 4명 2.2%를 나타내었다.

<표 3-24> 컴퓨터교육 불참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시간이 없다	40	22.1	38.8	38.8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다	4	2.2	3.9	42.7
	필요성을 못 느낀다	35	19.3	34.0	76.7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른다	18	9.9	17.5	94.2
	기타	6	3.3	5.8	100.0
	소계	103	56.9	100.0	
Missing	System	78	43.1		
계		181	100.0		

컴퓨터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다가 40명 2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가 35명 19.3%로 나타났다.

4.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한정된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고정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선정된 소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가 66명 36.5%로 가장 많았다.

읍·면사무소 유휴공간에서 문화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어느 계층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의 중복응답에서는 청소년(중,고등학생)에게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87명 48.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주부가 72명 39.8%로 나타났다.

<표 3-25> 주민자치센터공간활용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고정적인 공간에 소수프로그램	66	36.5	36.7	36.7
	다목적공간에 다양한 프로그램	63	34.8	35.0	71.7
	기타 의견	51	28.2	28.3	100.0
	소계	180	99.4	100.0	
Missing	System	1	.6		
계		181	100.0		

<표 3-26> 문화생활 프로그램 운영시 중점을 두어야 할 계층

		빈도	퍼센트
유효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	55	30.4
	청소년(중,고등학생)	87	48.1
	일반성인(대학생 포함)	22	12.2
	주부	72	39.8
	노인	46	25.4
	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 포함)	55	30.4
	계	181	100.0

<표 3-27> 주민자치센터 활용 시간대

		빈도	퍼센트	Valid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2시이전	31	17.1	17.2	17.2
	12-오후3시	23	12.7	12.8	30.0
	오후3시-6시	44	24.3	24.4	54.4
	오후6시이후	82	45.3	45.6	100.0
	소계	180	99.4	100.0	
Missing	System	1	.6		
계		181	100.0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냐는 질문에서는 오후 6시 이후가 82명 4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오후 3시-6시가 44명 24.3%로 나타났다.

<표 3-28> 컴퓨터와 인터넷 필요정도

		빈도	퍼센트	Valid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반드시 필요하다	48	26.5	26.7	26.7
	필요한편이다	81	44.8	45.0	71.7
	보통이다	44	24.3	24.4	96.1
	필요하지 않다	7	3.9	3.9	100.0
	소계	180	99.4	100.0	
Missing	System	1	.6		
계		181	100.0		

일상생활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이 얼마나 필요하느냐는 질문에서는 필요한 편이다가 81명 44.8%를 나타내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가 48명 26.5%로 많았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7명 3.9%로 나타났다.

<표 3-29>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아주 잘 다룬다	2	1.1	1.1	1.1
	잘 다루는 편이다	26	14.4	14.4	15.5
	보통이다	56	30.9	30.9	46.4
	서툰 편이다	53	29.3	29.3	75.7
	전혀 다루지 못한다	44	24.3	24.3	100.0
	계	181	100.0	100.0	

컴퓨터와 인터넷을 어느 정도 다루느냐는 질문에서는 보통이다가 56명 30.9%로 가장 많았고, 서툰 편이다가 53명 29.3%로 나타났으며, 전혀 다루지 못한다가 44명 24.3%로 나타났고, 아주 잘 다룬다는 2명 1.1%로 나타났다.

<표 3-30> 컴퓨터와 인터넷 배울 의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있다	76	42.0	73.1	73.1
	없다	28	15.5	26.9	100.0
	소계	104	57.5	100.0	
Missing	System	77	42.5		
계		181	100.0		

컴퓨터와 인터넷을 다루는 정도가 서툰거나 전혀 다루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 배울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있다가 76명 42.0%, 없다가 28명 15.5%로 나타났다.

<표 3-31> 컴퓨터 보유상황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있다	116	64.1	64.4	64.4
	없다	64	35.4	35.6	100.0
	소계	180	99.4	100.0	
Missing	System	1	.6		
계		181	100.0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냐는 질문에서는 있다가 116명 64.1%, 없다가 64명 35.4%로 나타났다.

<표 3-32> 인터넷 접속 가능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예	62	34.3	53.4	53.4
	아니오	54	29.8	46.6	100.0
	소계	116	64.1	100.0	
Missing	System	65	35.9		
계		181	100.0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가에서는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2명 34.3%, 불가능한 사람이 54명 29.8%로 나타났다.

<표 3-33> 주민자치센터 내 인터넷 이용 의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자주 이용하겠다	14	7.7	7.8	7.8
	가끔 이용하겠다	66	36.5	36.7	44.4
	보통이다	86	47.5	47.8	92.2
	이용하지 않겠다	14	7.7	7.8	100.0
	소계	180	99.4	100.0	
Missing	System	1	.6		
계		181	100.0		

주민자치센터 내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설치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냐는 질문에서는 보통이다가 86명 47.5%, 가끔 이용하겠다가 66명 36.5%, 이용하지 않겠다가 14명 7.7%를 나타내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인터넷을 포괄한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 1위에는 제증명발급이 58명 32.0%, 2위에는 민원서비스가 69명 38.1%, 3위에는 생활정보제공이 70명 38.7%, 4위에는

전자상거래 42명 23.2%, 5위에는 컴퓨터 인터넷교육이 51명 28.2%, 6위에는 학습정보제공(전자도서관가능)이 80명 44.2%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표 3 34> 읍·면사무소를 지역정보화로 사용하는 방안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전적으로 찬성한다	35	19.3	19.4	19.4
	찬성하는 편이다	93	51.4	51.7	71.1
	반반이다	50	27.6	27.8	98.9
	반대하는 편이다	2	1.1	1.1	100.0
	소계	180	99.4	100.0	
Missing	System	1	.6		
계		181	100.0		

읍·면사무소를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안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는 찬성하는 편이다가 93명 51.4%로 가장 많
았고, 반반이다가 50명 27.6%로, 전적으로 찬성한다가 35명 19.3%, 반대하는
편이다가 2명 1.1%로 나타났다.

<표 3 35> 지역정보화 공간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공동구매	43	23.8	23.9	23.9
	농축산업관련정보교류	56	30.9	31.1	55.0
	도시와직거래	48	26.5	26.7	81.7
	학습정보제공	30	16.6	16.7	98.3
	기타	3	1.7	1.7	100.0
	소계	180	99.4	100.0	
Missing	System	1	.6		
계		181	100.0		

읍·면사무소를 지역정보화 공간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는가에서는 농축산업관련 정보교류가 56명 30.9%로 가장 많았고, 도시와
직거래가 48명 26.5%, 공동구매가 43명 23.8%순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양주군 주민자치센터의 현황과 문제점

우선 양주군내 7개 읍·면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천읍의 경우,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연결하는 국·철도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근교 지역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덕정·고암 택지개발, 경원선 전철화로 2000년대 한수 이북 중심지역으로 발전이 예상된다. 그러나 신흥 발전지역으로서 영세기업체의 증가로 인해 공해요인의 유발이 예상되며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애항의식 결여 및 소득재원 유출이 우려된다. 전방지역으로 군부대가 다수 주둔(10개 부대)하고 있다.

양주읍은 의정부시의 인접지역으로 양주군의 관문이며 전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65.2%에 달하고 있다. 그 외 군사시설보호구역(19.6%), 성장 관리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행정수요로서는 유양공단(음성나환자촌) 26.8ha와 천주교 수련원, 로얄 골프장(27홀; 129ha)이 있으며 MBC 문화동산, 양주별산대놀이,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연수원이 위치하고 있다.

백석면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적으로 볼 때, 군청 서북방면 12km에 위치한 농촌형으로 도시근교원예(부추)농업과 축산업이 발달하고, 기산 지역이 향토마을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 행정적인 면에서 군 사단 주둔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8.8km²와 상수도 보호구역 2.6km², 개발제한구역 5.18km² 등 발전적 제한요소가 있으나, 성장개발권역으로 방성리, 복지리 등 일부지역이 빌라 및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 인구증가 추세와 도시행정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군 전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 구역

등 개발제한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택지 개발 등 개발 역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읍·면 기능전환 시책에 따라 2000년 5월 3일, 경기도 양주군은 전체 7개 읍·면 모두가 읍·면 기능전환 전국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비 5억 6천만원, 도비 2억 6800만원, 군비 5억 7600만원 등 총 14억 4백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 12월 7개 읍·면 사무소를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으로 개·보수하여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이하에서 각 주민 주민자치센터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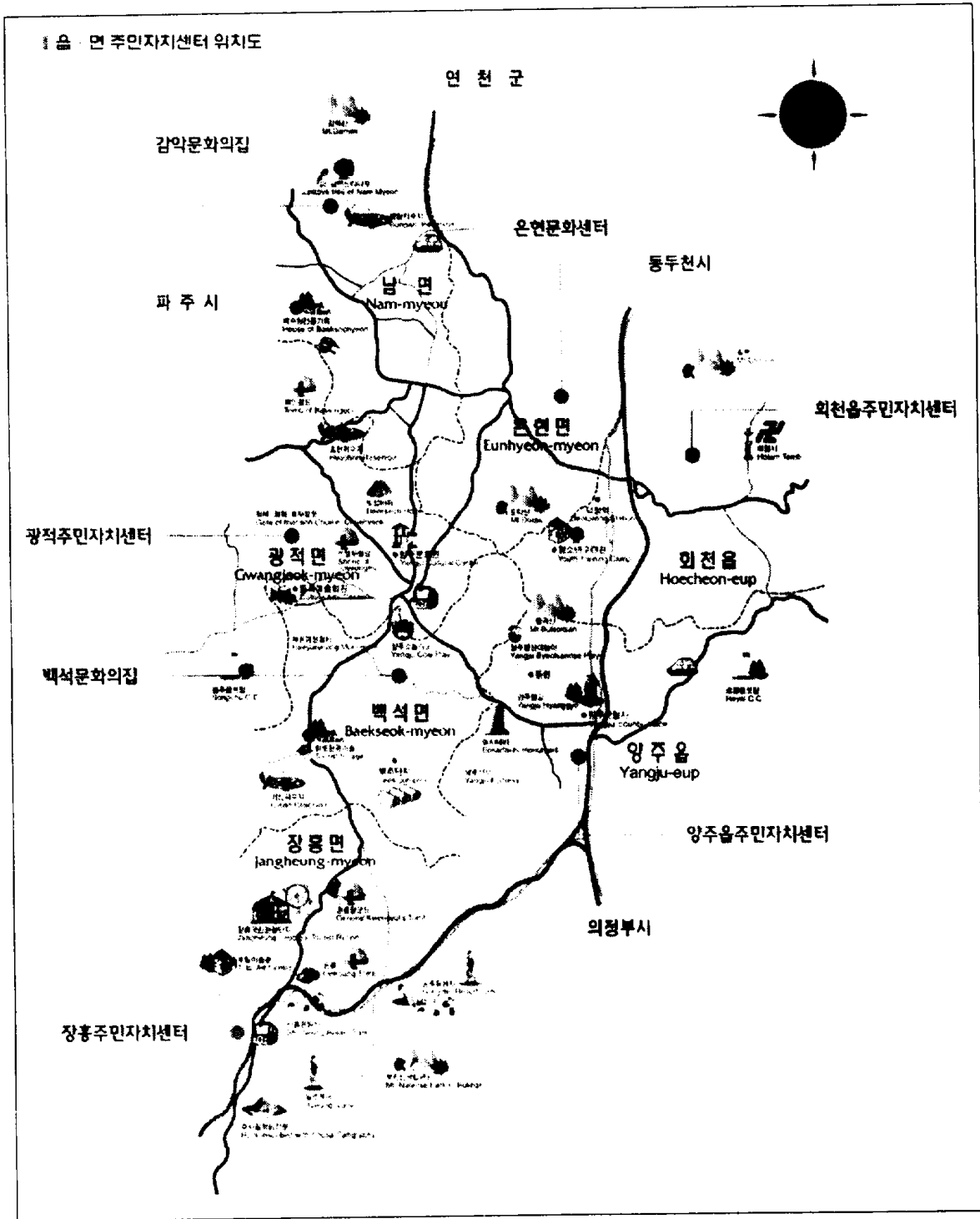
회천읍의 경우, 명칭은 회천읍 주민자치센터이며 본관 2층, 별관 2층에 인터넷방(17평), 주민 휴게실(15평), 영화감상실(26평) 등이 설치되어 있다.

양주읍의 경우, 명칭은 양주읍 주민자치센터이며 운영프로그램은 인터넷, 생활체육교실, 노인대학, 유적지 탐사반, 꽃꽂이 동우회, 사진 동우회, 서예 동우회가 있다. 주요시설로는 본관 1, 2, 3층과 별관 1층에 민원휴게실, 인터넷방, 주민대화방(13평) 등이 있다.

은현면의 경우, 은현 문화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꽃꽂이 교실, 종이접기, 서예교실, 미니 독서실, 인터넷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주요시설로는 1, 2, 3층에 행정민원실(54평), 인터넷 방 및 미니독서실(27평), 주민대화방(16평), 다목적실(39평), 취미교실(16평)이 있다.

납면은 감악 문화의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주요시설로는 본관 1, 2, 3층에 행정민원실(58평), 주민대화방(21평), 주민휴게실(16평), 정보 이용실(21평), 다목적실(32평), 취미교실(13평)이 있다. 컴퓨터 교실, 스포츠 댄스, 서예교실, 종이 접기, 인터넷이 있다.

<그림 3-1> 양주군 읍·면 주민자치센터 위치도



광적면은 광적면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컴퓨터교실, 서예교실, 꽃꽂이교실, 수지침강좌, 통기타교실, 탁구교실, 영화감상, 이미용실,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의 체력단련실, 1층 행정민원실(58평), 2층 주민과의 대화실(16평), 인터넷실(18평), 정보이용실(21평)과 3층에 다목적실(24평), 취미교실(20평)이 있다.

백석면의 경우, 백석문화의 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서예교실, 꽃꽂이 교실, 수지침강좌, 스포츠댄스, 생활체육교실, 인터넷이 있다. 주요시설로는 1층 주민휴게실(5평), 2층 작은 독서실(14평), 인터넷 방(7평), 주민과의 대화실(12평), 3층 다목적실(30평), 취미교실(15평), 별관 생활 체육실(60평)이 있다.

장흥면의 경우, 장흥면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컴퓨터교육, 서예교실, 꽃꽂이 교실, 발맞사지, 스포츠댄스, 인터넷이 있다. 주요시설로는 1층 행정미원실(99평), 2층 주민대화방(15평), 인터넷 방(15평), 다목적실(27평), 취미교실(21평), 3층에 체력단련실(21평)이 있다.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양주군 주민자치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대부분이 비슷한 시설과 공간 배치를 하고 있으며 꽃꽂이, 영화감상, 스포츠 등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유사 사설기관과 프로그램들이 중복되고 차별화 정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핵심역할을 해야 할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주민의 대표 역할과 지역사회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들이 프로그램 수강료를 일부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무료 혹은 재료비만 받을 것을 희망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와 만족하지 못한다가 56.9%, 대체로 만족한다와 아주 만족한다가 42.1%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지 않으므로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일선 공무원과 자치단체의 소극성과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설립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제까지의 관행과 행정적 편의에 의한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개혁의 실질적인 주체를 형성해나가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제 4 장 농촌형 주민자치센터의 발전 방안

제 1 절 농촌 주민의 참여를 위한 선행 조건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다수의 주민자치센터가 천편일률적인 시설, 공간 배치를 하고 있으며 취미, 교양류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나열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변의 유사한 사설기관과 중복되고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군 역시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유사 사설기관들과 중복되는 것들이 많고 지역별로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²²⁾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주민자치위원의 대부분이 과거 행정보조적 기능을 하던 단체의 임원이나 정치적 성향을 갖는 지역유지들로 구성되어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지역사회봉사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이 동장의 자문기구로 한정됨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 밖에 일선 공무원과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자세,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저항,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민자치센터 설립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까지의 관행과 행정적 편의에 의해 사업이 추진

22)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에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이다.

되거나 개혁을 밀고 나갈 주체를 뚜렷이 형성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이러한 점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에서도 그 목적을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 라고 규정하여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성격은 행정의 연장선에 있는 서비스기관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기관을 지향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민간적(private)이고 비영리적(non-profit)이며 자원적(voluntary)이고 자치적(self-governing)인 성격을 구현할 때만이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자기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행정인력 감축과 읍·면사무소의 기능이전에 따른 공간활용이란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주민 자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관심이 부족하고 행정의 연장선에서 문화, 복지 서비스의 확대라는 기능적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나마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한계를 낳고 있다.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해에만 머물러 있는 농촌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 계기를 만들어 주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자치와 공동체 의식을 훈련하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즉,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히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개방하거나 몇 가지 취미, 교양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 궁극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²³⁾ 그러므로 주민자치센터의 소장이나 담당자로 공무원이 임명되거나 파견되는 것은 가능하고 어느 정도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주민자치기구를 관리, 감독하거나 대신해서는 안 되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자이자 공익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다.

개혁은 일방적 선언과 지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설득과 홍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홍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보나 인쇄물을 통한 프로그램 소개 정도이다. 홍보의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성격과 목적에 대한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주민참여방안과 관련한 홍보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시설이나 프로그램 배치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는 공개제안, 자원봉사자

23)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권을 주려 했던 서울시 노원구의 조례가 상급 기관에 의해 거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의 자율적 자치기구로 보지 않고 행정기구의 연장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주민자치센터의 직접 민주주의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해, 행정과 지방의원들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의 공개모집 등이 홍보내용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중앙행정부 차원에서 언론 등을 통한 대규모의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홍보방법으로는 형식적인 인쇄물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설명회, 주민자치위원 후보에 대한 공개청문회, 주민욕구 설문조사, 명칭, 공간활용방안 등에 대한 공모, 작품전시회 등 창조적인 주민참여방안을 동원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마을신문 편집진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발행하게 하면서 행정은 정보제공, 인쇄, 배포 등의 역할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홍보가 곧 주민참여를 위한 주요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빈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와 대안에 대한 준비와 육성을 통해서만 개혁이 가능한 것이다. 구조조정과 기능전환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일 뿐 그것이 개혁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2. 효율적인 민·관 협력 체제

주민자치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바람직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형적인 민·관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애항심이 강하고 자치적인 민간조직을 운영해온 전통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행정에서의 민·관 협력 모델은 관(官)이 주도하고 민(民)은 그에 협조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민이 주도해야 할 것과 관이 주도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민이 주도해야 할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기능인 주민 자치력의 향상과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같은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기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은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software)을 민이 담당하고 관은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시설적 지원(hardware)을 담당하는 모델이고, 이러한 모델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민·관 협력의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방식을 농촌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을 만들기는 놀이터, 공원,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의 건축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지방행정의 발상을 전환하여 그 과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마을의 제집단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중시하는 것은 좋은 시설을 설치하느냐보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애정을 갖고 참여하느냐하는 점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서도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환경, 교통, 교육, 복지, 범죄, 재난관리, 시설유지 등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하여 해결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행정은 이러한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새로운 민·관 협력을 위해서는 관의 태도 변화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민(民) 스스로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 그간 민간 시민운동은 비판과 견제를 주목적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고발하며 개선책을 촉구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는 그 자체의 성격과 목적이 민의 직접적 참여와 운영을 통해야만 하는 것이므로 주민자치센터를 매개로 생활권 단위에서

의 주민과 밀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주민들의 자치적인 모임을 조직하며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운동을 향후 시민운동의 주요한 사업방향으로 삼아야 한다²⁴⁾.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참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생적 주민 리더십의 발굴과 육성이다. 주민자치센터는 농촌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속에서 리더십이 나오고 리더십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간 주도로 지역 사회의 여러 민간기관들, 학교, 도서관, 종교기관, 복지기관, 언론사, 상공업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창조적인 지혜가 요구된다.

제 2 절 농촌형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 주민자치위원회 인적구성의 다양화

주민자치위원회는 농촌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생적이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 모임, 기관에서 파견한 위원들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동아리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이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주체가 되게끔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봉사자들로 이루어

24) 주민자치센터는 이제까지의 행정사무소를 동네사람들이 토론하는 자치 방이나 교육실, 정보센터, 문화의 집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그 동안 주민들과 함께 해 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즉 동네하천 생태기행, 마을축제, 방과후 학교, 각종 강습과 교육 등등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그릇을 채울 적절한 내용인 것이다.

져야 하고 여성과 청년들이 많이 결합해야 한다. 전문가의 참여를 권장하되 전문성의 기준에서 주민자치활동, 주민자율단체 활동경험 등이 중시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 선임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필요하면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25). 임기제로 하되 매년 1/2씩 재선임하도록 하는 등, 개방성을 보장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선임권은 현재의 읍·면장 권한에서 주민자율권으로 이양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위원별 프로그램 담당 책임제나 회비납부 의무제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2. 운영요원 (전담실무자와 자원봉사자)의 육성과 교육

농촌지역의 경우 전담 실무 등에 종사할 관련 전문가가 도시보다 훨씬 부족하므로 전문가 확보가 시급하다. 전문가 확보를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나 생활 편의 제공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담실무자는 주민자율단체의 운영경험이나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집행 등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 과정이나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담실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전담실무자가 된 이후에도 농촌 지역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정기적

25) 예를 들어 여성위원 비율을 40%이상으로 의무화한다든지, 연령별 강제 배정을 통해 청년층의 참여를 보장한다든지, 직선통장이나 아파트 자치회 등 직접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파견한 위원이 50%이상을 차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이다.

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전담실무자가 기존의 공무원일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이외의 다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하며 민간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지역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양주군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1단체 1책임 프로그램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와 주민모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민간단체에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하며 단체의 선정을 위해서는 홍보와 적절한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전담 실무자는 이러한 위탁 프로그램 간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실증분석 결과,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냐는 질문에 반반이다가 44.2%, 약간 도움이 되고 있다가 40.9%,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가 10.5%, 도움이 안되고 있다가 4.4%를 나타내었다. 이를 볼 때 예상보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과 전담실무자 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 교육과정은 농촌지역의 읍·면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최소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종합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관 합동 워크숍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많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3. 주민자치 환경조성과 재정확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주변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군청으로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 지시하거나 의존함이 없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동안 중앙 행정부처나 시·도에서도 읍·면·동사무소에 조사나 자료수집 등의 업무지시가 많았으나 이제는 인력도 축소된 만큼 읍·면사무소가 존치 업무와 주민자치센터 지원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재원을 충분히 보조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주민자치의 활성화가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임무인 만큼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기존 읍·면사무소 유지비용의 절반만 주민자치센터에 투자하더라도 민간의 창조성과 자율성이 결합된다면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투입재정의 지출에 있어서도 시설비 위주의 경직성 경비를 지양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중앙행정부와 정치권도 주민자치센터의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현실정치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거나 일시적 저항에 굴복하여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새로운 시민사회문화를 창조한다는 신념으로 국민을 믿고 민간과 협력하여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4. 민·관 협력과 주민자치센터간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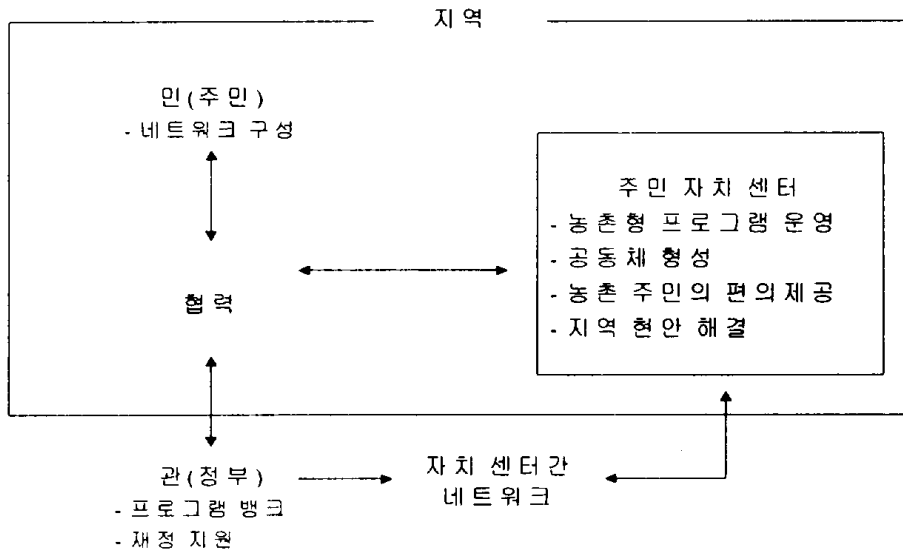
주민자치센터의 초기단계에서는 특히 주민자치센터간 혹은 외부 관련시설간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특성에 따른 특성화 전략을 시도할 수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몇 개를 묶어서 역할분담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센터 운영주체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협조, 지원의 필요성도 매우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민·관 협력 위원회와 프로그램 बैं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기능 재편과 구조조정은 행정 고유의 권한이고 의무이겠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만큼은 민간시민단체의 협조와 노하우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시에 모든 읍·면이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로 정착될 수는 없다. 그러기에 모델을 개발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률적으로 관 주도 단계 -> 민관합동 단계를 거쳐 민간주도형으로 갈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적어도 한두 개의 주민자치센터는 민간주도형으로 개방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실험과 함께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봄직하다. 창원시의 경우, 읍·면·동 기능 전환 훨씬 이전부터 대동제(大洞制)를 실시하고 잔여공간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주민복지센터나 사회교육센터로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본 예가 있다.

주민자치센터간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별로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간 링크를 하여 사이버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이버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도 교환하고 매년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개최하여 잘된 사례는 전시하고 포상하는 것도 모델 확산의 좋은 방법

일 것이다.

<그림 4-1> 농촌형 주민 자치센터 모델



농촌형 주민자치센터의 모델을 양주군의 실증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 요금의 형태는 무료 혹은 저렴하게 책정한다. 설문조사 결과, 무료로 해야 한다가 58.6% 재료비만 받아야 한다가 36.5%로 나타났으므로 이용 요금의 형태는 무료로 하거나 혹은 저렴하게 책정해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유형은 주민 편의 제공 위주로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주민 자치센터가 수행해야 될 5가지 기능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주민편의 제공이 33.7%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양주군내 문화센터들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여가활동 및 평생교육제공에 대해서는 24.3%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2위에 머물렀다. 따라서 현재 문화·여가위주로 치중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재편하여 주민편의 제공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한 평가에서는 그저 그렇다 49.7%, 대체로 만족한다 40.9%, 아주 만족한다 2.2% 로 나타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지도는 아주 잘 알고 있다 17.1%, 조금 알고 있다 42%, 보통이다 34.3%, 모른다 6.6%로 대체로 알고는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한 인지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보다 정보화가 뒤떨어지므로 세부적인 주민자치센터 관련 사항들,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자원봉사제도의 운영 등에 대한 이해가 보다 더 필요하므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추가되어야 할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양주군 주민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선택한 지역 특산품 개발 프로그램과 창업교실 운영, 예식장, 농산물 직거래, 농·축·임·수산업 관련정보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정보통신 문화의 향상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시간이 부족해 수강할 수 없다는 답변이 많았으므로 출장 교육, 원격교육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 5 장 결론

농촌형 주민 자체센터의 바람직한 모델은,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갖고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좁은 센터 공간 내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의 각종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도서관, 종교기관, 복지시설, 문화센터 등과 연계하여 농촌 주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센터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중재, 조정, 배치하는 등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여타 민간부분의 프로그램과 경쟁하지 말고 보완하거나 네트워크 기능을 해야 한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와는 달리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저학력·고령자, 농업 종사자들이 많으므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양주군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0년 이상 거주민이 38.7%, 1-5년이 36.5%, 5-10년이 19.3% 였다. 주거형태는 개인주택(49.7%) 위주이며 대부분 차량을 소유(72.4%)하고 있다. 월 평균 수입은 도시보다 낮은 150-199만원(29.8%)이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졸(50.3%)이, 직업은 기타(33.7%)가 가장 많았고, 판매/서비스직이 17.7%, 농업은 15.5%였다.

기존의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경우, 기능별로 가장 바람

직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2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먼저, 주민편의 영역에서의 첫 순위로 지역 특산품 개발이 20.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창업교실 운영(18.8%), 예식장(17.1%), 농산물 직거래(14.4%)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정보서비스영역에서의 첫 번째 순위로는 노동 및 고용정보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각종 여행정보(21.0%)로 나타났다.

복지시설영역에서의 첫 번째 순위에서는 생활보호가 32.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아동복지(32.0%)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및 평생교육영역에서의 첫 번째 순위에서는 각종 동호회 활동이 33.1%로 가장 높았고, 레크리에이션이 17.7%로 나타났다.

행정서비스영역에서의 첫 번째 순위에서는 제증명 발급이 46.4%로 가장 높았다. 주민자치센터가 수행해야 할 5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은 무엇인가에서는 주민편의 제공이 33.7%로 가장 많았고, 문화·여가활동 및 평생교육 제공이 24.3%, 복지시설 제공이 16.6%, 생활정보 서비스제공이 16.6%, 행정서비스 기능이 9.4%로 나타났다.

읍·면사무소를 지역정보화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으로는 농축산업관련정보교류가 30.9%로 가장 많았고, 도시와 직거래가 26.5%, 공동구매가 23.8%이었다.

농촌 지역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자치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고 관리와 운영도 기초자치단체의 주도하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농촌 주민들 스스로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농촌형 주민자치센터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위원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하여, 여성과 청년들을 많이 참여시키며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생적이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 모임, 기관에서 파견한 위원들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동아리 대표들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여 이들이 실질적인 센터 운영의 주체가 되게끔 한다.

둘째, 도시보다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운영요원 (전담실무자와 자원봉사자)의 육성과 교육이 더 필요하다.

셋째, 환경조성과 재원의 마련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주변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군청으로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 지시하거나 의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민관 협력과 주민자치센터간 네트워크구축이다. 주민자치센터간 상호정보를 교류하고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도 교환하고 프로그램경연대회도 열어 잘된 사례는 전시하고 포상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정보통신 문화의 향상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시간이 부족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출장 교육, 원격 교육의 도입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도시지역보다 소수이긴 하지만 활동력이 강한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야 할 해당 농촌 지역의 시민조직의 역할 역시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구자훈·이희정, “상세계획제도의 서울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및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30권 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5.10

국토개발연구원, 「도시선진화를 위한 상세계획 활성화 방안 연구」, 1998

김도년,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하는 도시환경 정비”, 「서울시정연포럼」, 제 40호, 시정개발연구원, 1997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8.

김석배,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효율화 전략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김연수, “지역사회복지관에서의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김영호,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 강화방안”, 「한국사회복지」, 강남대 부설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95.

김원, 「도시행정론」, 박영사, 1988

김종해, “도시지역 지역사회행동의 주민참여 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대한주택공사, 「주민참여에 의한 설계·계획과정 연구」, 1990

문승국, “일본의 주민참여형 도시정비수법에 관한 연구 -마찌즈꾸리의 실적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박성수, 「지방자치의 이해」,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9.

박정호, “주민참여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박태영,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관계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4.
- 백종만, "지역사회복지와 주민의 참여", 『제1회 전라남도 사회복지대회 자료집』,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 1994.
- 서영진,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나남, 1998.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개발사업수행을 위한 협상연구」, 1994
 -----, 「서울시 상세계획 수립지침 연구, 1997
 -----, 「주민참여형 상업지정비수법개발」, 1996b
 -----, 「주민참여형 주거지정비수법개발」, 1996a
- 신대현, "상세계획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윤정현, "도시행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윤주선·박병주, "도시공간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한 민관협력형 도시개발사업계획에 관한 서술적 연구", 「국토계획」 제30권 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5. 10
- 이달곤, 「협상론」, 법문사, 1996.
- 이승종 역, 「지방화시대의 주민참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4
- 이승종, 「민주정의와 시민참여」, 삼양사, 1993.
- 이영철, "사회복지관", 「한국사회복지학의 평가」,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2,
- 이윤정,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수립단계별 주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은호 외, 「행정학」, 박영사, 1987
- 이정록,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및 대응형태", 「국토 계

- 획」 제30권 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5.10
- 이화진 역, “2000년대의 지방자치와 지역경영”, 「지방자치」, 제2호, 지방자치연구원, 1988.
- 이회정, 「서울시 상세계획 수립지침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 임길진, 「미래를 향한 인간적 계획론 - 계획이론의 종합」, 나남출판, 1997
- 정 석, “도시설계: 약자를 생각하며 도시삶터 가꾸기”, 「서울시정연포럼」 제40호, 시정개발연구원, 1997.
-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4
- 정준현,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판례검토, 「지방자치」, 통권48호, 1999.
- 정희천, “한국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조성희, “사회복지시설의 개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지양진, 「저소득층 지역사회접근론」,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7.
- 최영선, “상세계획과정에서 계획형향요소로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최일섭·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 출판부, 1997.
- 행정자치부,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 지침, 2000, 3.6.
- , 동 기능전환 추진실적, 2000, 12.31.
- ,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2000.
- ,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추진 지방자치단체 수범사례집, 2000.10.
- , 읍면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 -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 관련 -, 2000, 8.16.
- ,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준칙, 2000. 1.11.

<기타>

박홍순, 주민자치센터와 Community의 활성화, <http://opence.or.kr/book/ob15/with1.htm>.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네트워크, 공지사항, 2000,12-2001,2.
http://www.community.simin.org/htm/U_main.asp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 1999,12.
<http://www.kcm.or.kr/jumin/jumin.htm>

21C 양주아카데미, <http://www.yangju.kyonggi.kr>.

김찬호, 일본마을만들기의 전개와 의미, <http://miritel.co.kr/~dorandow/festival/guest/japan-town.htm>

시민참가형 마을조성의 저해요인에 관한 고찰, <http://www.nagaoka-nid.ac.jp/~swata/NIDronsyu97.htm>

주민참가의 정의와 변천과정, <http://lee1.en.a.u-takoy.ac.jp/hash/researchresults/ksk/ksk1997.htm>

<국외문헌>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for Planners*, Vol.35, p.217.

Rao, A. P., "Community Participation: Theoretical Issues and Operational Guidelines", UNICEF, New York, 1981.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Farm Village Type

People's Autonomous Center

- Focused on the Model Town Yangju-gun -

Kim, Young-Jae

Major in Social Welfare

Dept. of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autonomous local administration by the election, the local administrations began to be operated centering around city, county or ward, while the roles of such lower offices as "up", "myon" or "dong" have weakened gradually. The Ministry of Administrative Autonomy announced that "dong" offices in the urban area would be reshuffled until the year 2000, and that "up", "myon" and "dong" offices in the rural area would be subject to reform until 2001.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deemed necessary to study the roles of villagers' autonomous centers and their specific programs. Rural regions lack such infrastructures as roads and traffic facilities, while each region has its own histor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Moreover, the rural regions are wider and sparser than urban areas, and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invite the people to the administration. In short, local people are less aware of the autonomous centers. The announcement that reform of "up" and "myon" offices in rural areas would be delayed than in urban areas may well be attributable to such conditions. This study focuses on the model county Yangju-gun of Kyonggi do; all the 7 "ups" and "myons" were designated as model autonomous centers as of May 3, 2000, and they were all converted into villagers' autonomous centers in December, 2000. Currently, each "up" or "myon" of Yangju-gun has its own characteristics as well as different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s. In consideration of such unique autonomous centers, this study explored the ways to help develop differentiated autonomous centers in the rural area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villagers' autonomous committee should be reformed to invite more women and youth as well as various spontaneous public groups and meetings, public organization representatives and villagers' autonomous center program subscribers. Then, the committee would be able to play a pivotal role for villagers' autonomous center. Second, managers (full-time manager and volunteers) need to be fostered and educated. Third, a favorable environment should be created, while the financial resources be arranged. Any good system cannot be operated effectively without a good environment. In this regard, the public services mandated to the county administration should not be mandated again to "up" or "myon" offices. Fourth, a network between public, private and autonomous center needs to be construct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share experiences among them. First of all, Internet homepages need to be constructed for each villagers' autonomous center, and these homepages be linked with each other. In short, a cyber network should be constructed covering all the autonomous centers. Then, the autonomous centers can exchange programs with each other; a program contest may be designed to help develop better programs. In addition, in order to promote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culture of the rural areas falling behind the urban areas, more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for the rural autonomous centers. Lastly, since many villagers say that they cannot attend the programs provided for by the autonomous centers, it is deemed necessary to introduce a lecturer dispatch system and a remote education program for them.

(부록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본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기도 양주군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지역 주민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처리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으므로 어떠한 불이익도 초래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덧붙여 모든 질문 하나 하나가 귀중한 자료이므로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귀하의 소중한 응답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오니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 조사에 협조해 주신 응답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김영재

※면접원은 반드시 응답자가 양주군에 거주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지금부터 본 질문이 시작됩니다. 면접원 여러분은 질문을 또박또박 읽어주시고, 응답자의 응답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I.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재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자치(문화)센터」는 양주군주민들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읍·면사무소가 기능 전환된 것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여러 문화·예술·생활관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 주부, 노인 등 모든 주민들을 위해 개방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 관해 귀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귀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아주 잘 알고있다
- ②조금 알고 있다
- ③보통이다
- ④고있지 않다

2.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①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②약간 도움이 되고 있다
- ③반반이다
- ④도움이 안되고 있다

3.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수강료에 대해서는?

- ① 무료로 해야한다
- ②재료비만 받아야 한다
- ③ 수강료, 재료비를 모두 받아야 한다

4.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 ① 아주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만족하지 못한다

5. 기존의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5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각 기능별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 2개를 골라 주십시오.

구분	보기	선택순위
1)주민편의 영역	1.창업고실 운영 2.지역 특산품 개발 3.각종단체모임 및 주민회의장 4.예식장 5.증고품교환 6.농산물직거래 7.농·축산업, 임·수산업 관련 정보 8.민원상담	1위 : 2위 :
2)생활정보 서비스 영역	1.각종 여행정보 2.교통예약 3.물가 및 주식 등 경제정보 4.노동 및 고용정보 5.농업정보교환, 영농상담	1위 : 2위 :
3)복지시설 영역	1.생활보호 2.아동복지 3.노인복지 4.장애아동교육 및 치료실 5.탁아실	1위 : 2위 :
4)문화·여가활동 및 평생교육 영역	1.각종 동호회 활동 2.레크레이션 3.어학강좌 4.법률강좌 5.공부방 6.보충 수업 7.영화·음악감상실	1위 : 2위 :
5)행정서비스 영역	1.제 증명발급 2.전·출입 신고 3.예비군 업무 4.민원 업무 5.재난·재해 관련 업무 등	1위 : 2위 :

6. 「주민자치센터」가 수행해야 할 5가지 기능 중에서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각 기능별 자세한 내용은 위 설문항목을 참조)

- ① 주민편익제공기능
- ② 생활정보 서비스제공기능
- ③ 복지시설제공기능
- ④ 문화·여가활동 및 평생교육제공기능
- ⑤ 행정서비스기능

II.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7. 귀하가 주민자치센터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면 그 이유는?

- ① 시설 또는 프로그램이 일상생활에 유용해서
- ② 무료이거나 비용이 저렴해서
- ③ 여가선용을 위해서
- ④ 민원업무로 면사무소 방문 시 이용할 수 있어서
- ⑤ 취업 등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⑥ 기타 _____

8. 면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해 처음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 ①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 ② 군청, 면사무소의 홍보 전단지를 통하여
- ③ 반상회를 통하여
- ④ 면사무소를 방문하고 나서
- ⑤ 이웃 주민들에게 들어서

9. 귀하께서는 위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무원
- ② 주민자치단체
- ③ 전문경영인
- ④ 공무원과 주민자치단체의 연합체
- ⑤ 기타 _____

29. 차량보유: 1) 없음 () 2) 있음 ()
30. 월평균수입: 1) 99만원 이하 () 2) 100-149만원 () 3) 150-199만원 ()
 4) 200만원-299만원 () 5) 300만원 이상 ()
31. 학력: 1) 초등졸업이하 () 2) 중졸 () 3) 고졸 ()
 4) 대학생 () 5) 대졸 () 6) 대학원 이상 ()
32. 직업: 1) 의사/변호사/전문직 () 2) 관리/사무직 ()
 3) 판매/서비스직 () 4) 생산직 ()
 5) 교사/교수직 () 6) 공무원 () 7) 농업 () 8) 기타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양주군의 현황

양주군은 의정부, 동두천,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2개 읍과 5개 면, 총 7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삼국시대에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백제지역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고구려의 남진에 따라 고구려의 매성군 또는 창화군으로 불렸으며, 다시 백제 땅으로 환원되는 등 삼국의 각축전에 따라 그 변화가 심하였다.

그 후 통일신라시대 경덕왕(757년)때에는 래소군에 속했으며 고려 태조시대에는 견주에, 조선 태조 6년(1397년)에 치소(治所)를 고지(古址; 주내면 고읍리)로 하고 양주라 칭하였다. 세종 12년(1430년)엔 양주목으로 승격되었으며, 州(坡州), 郡(高陽), 縣(永平, 抱川, 積城, 交河, 加平)을 두었고 중종1년(1506년)에 치소를 유양리로 옮겼으며 고종 32년(1895년)에 양주군으로 되었다.

1. 회천읍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회암면과 천천면에서 각각 회자와 천자를 따와서 회천면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회정리, 덕계리, 고암리, 회암리, 울정리, 옥정리, 덕정리, 봉양리, 8개 리로 면사무소는 고암리에 설치하였다.

1981년 2월, 17개 리로 개편, 1982년 4월 19개 리로, 1985년 6월 25개 리로 늘어났다. 1985년 10월 1일 회천읍으로 승격되었고, 1987년 7월 28개 리로 증설되었으며, 1995년 4월 39개 리 209개 반으로 증설되었다.

<표1> 양주군의 행정 구역 변천

일 시	행 정 현 황
1922. 10. 1	본군 청사가 주내면 유양리에서 시둔면(현. 의정부시)로 이전
1946. 2. 5	연천군 남면을 편입, 1읍 16개 면이 됨.
1963. 1. 1	의정부읍이 시로 승격 화도면의 3개리, 진접면의 1개리, 가평군 외서면 3개리를 합쳐 수동면을 신설 노해면의 9개 리와 구리면 5개 리가 서울특별시에 편입 1읍 15개 면이 됨.
1973. 7. 1	포천군 포천면 탑동리를 동두천읍에 편입, 구리면이 구리읍으로 승격하여 2읍 14면이 됨.
1979. 5. 1	미남면이 미남읍으로 승격하여 3읍 13면이 됨.
1980. 4. 1	구리읍, 미남읍, 진접면, 진건면, 화도면, 수동면, 와부면과 별내면 일부가 남양주군으로 신설분군 1읍 7면이 됨
1981. 7. 1	동두천읍이 시로 승격되어 7면이 됨.
1983. 2. 15	은현면 상패리(5개리)를 동두천시로, 백석면 기산, 영장리를 파주군으로 이속.
1985. 10. 1	회천면이 회천읍으로 승격, 1읍 6면이 됨.
1987. 1. 1	파주군 광탄면 기산리 일부가 양주군 백석면으로 편입
2000. 9. 25	군청사를 의정부에서 현 양주읍 남방리로 이전
2000. 10.1	주내면이 양주읍으로 승격하여 2읍 5면이 됨.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연결하는 국·철도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근교 지역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전방지역으로 군부대가 다수 주둔(10개 부대)하고 있다.

2. 양주읍

조선시대 말까지 읍내면(邑內面)이라 칭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접한 고주내면(古州內面)을 폐합하여 주내면으로 개칭되었다.

1922년 주내면 유양리에서 시둔면(현, 의정부시)으로 이전되었던 군 청사가 2000년 다시 이전해 읍에 따라 양주읍이라 개칭하였다. 동쪽에는 천보 산맥의 포천군 소흘읍에 접해있고 북쪽은 도락산을 두고 회천읍, 은현면과 접하며 서쪽은 불곡산 호명산의 웅립(擁立)으로 백석면에 접하고 남쪽은 의정부시에 접해 있다. 주위의 산세(山勢)가 평완하여 곳곳에 평야를 이루어 비옥한 곳이며 그 중 고주내(古州內) 평야는 양보다 질이 우수하여 쌀 생산지로 이름이 높다.

인구는 5,598세대 17,431명명으로서 농가 1,180세대, 비농가 4,418세대이다.

의정부시의 인접지역으로 양주군의 관문이며 개발제한구역이 65.2%에 달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19.6%), 성장 관리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은현면

양주군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966가구(농가 : 804가구 비농가 : 2,162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진답이라 칭하다가 묵은면이라 개칭하였고, 은내면은

<표 2> 양주군 각 읍·면 현황 (2000. 12 현재)

읍면 내용	회천읍	양주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백석면	장흥면
면적	42.39km ² (군309.83km ² 의 14%)	42.36km ² (13.6%)	34.52km ² (11%)	36.69km ² (11.8%)	48.36km ²	41.4km ²	63.06km ²
세대 및 인구	11,435세대 35,968명 (군비35%)	5,598세대 17,431명 (군 13.9%) (남 8,949, 여 8,482)	2,966가구 9,048명 (군9.6%) (남 4,766 여 4,282)	3,119 가구 9,279명	3,713 세대 11,133명	5,571세대 17,604명 (남 9,012, 여 8,592)	2,870가구 8,614명
행정구역	39개리 209개반	20개리 86개반 (법정리9개)	12개리 73개반	20개리 89개반	15개리 86개반	19개리 71개반	11개리56 개반
행정기관 및 공무원수	2과 1소 8담당 41명	3담당 17명 (총무,주민, 산업담당)	3개부서 13명	3담당 15명		3개부서 15명	3개담당 17명
기타	도로포장율 35.5km (89%)	수리안전 531ha(80%)	도로포장 33.5km (97%) 군사보호 14.77km ² (43%)	도로포장 24.4km (100%)		1,123ha (전499.1ha, 답623.9ha)	개발제한 구역 46.24km ² (73.3%)
관광지	회암사, 칠봉산	양주별산대 놀이, 양주산성	도락산	감악산 저수지 4	빛섬 바위 송추CC	향토관광 마을, 기산저수 지	장흥국민 관광단지, 송추·일 영유원지
학교	4개교 122학급 5,199명 (초3, 중1)	초등학교 3개교	초등학교 3개교 (755명)	4개교 1,666명	초등 1개 중등 1개교	3개 초등학교 1,419명	초등학교 2개교 574명
기업체	534개업체 11,900명	268개업체	319업체 3,728명	182업체 3,128명		98개업체 711명	24개업체 267명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사천현이 있었다 하여 은내라 칭하였으며, 한일병합 후 1914년 면 행정구역 폐합 때에 운담면 이산리·황매동·송라·안흥의

일부가 상패리, 이담면 송라리가 하패리, 적성군 남면 입암리·발운리 각 일부가 운암리, 이담면 안흥리와 적성군 남면 한산리 각 일부가 봉암리, 석적면 향동리·행동리·대야지리·각 일부가 도하리로 편입되었다.

당시 면소재지는 용암리였으며, 은현이란 명칭은 묵은과 현내의 이름을 따서 칭하게 되었고, 7개 리로 행정구역을 정하여 오다가 1957년 1월 17일부터 상패리를 1리와 2리로 분리하여 모두 8개 리가 되었으며, 1964년 12월 5일 상패리가 1·2·3리, 용암리가 1·2리, 하패리가 1·2리, 도하리가 1·2리로 분리되어 모두 12개 리가 되었으며, 1980년 1월 4일 상패리가 1·2·3·4·5리가 동두천시로 편입되어 11개 리가 되었고, 1984년 12월 24일 현청사를 신축하였고, 1987년 1월 1일 운암리를 1·2리로 분리하여 용암1·2·3리, 선암1·2리, 운암1·2리, 봉암리, 하패1·2리, 도하1·2리로 모두 12개 리가 되었으며, 1999년 3월 8일 남면 한산2리 일부가 은현면 봉암리로 편입되었다.

4. 남면

남면은 한말에 적성군에 속하였으며 신암리, 매곡리, 구암리, 사촌리, 두곡리, 경신리, 상수리, 발운리, 마산리, 입암리, 신산리, 황방리, 임간리, 한산리 등 14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그러다가 1914년 3월13일에 도령 제3호로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이때 매곡리, 한산리, 입암리, 상수리, 발운리 등 5개 리에서 각각 일부지역을 분리시켜 양주군에 편입시키고 양주군 석적면 회촌리, 이패하리, 향동리, 묵은면 사패리 등 4개 리에서 일부지역을 떼어내어 남면에 편입시켰으며 신암리, 매곡리,

구암리, 두곡리, 경신리, 상수리, 입암리, 신산리, 황방리, 한산리등 10개 리로 개편하였다. 당시 면사무소는 매곡리에 있었다.

1945년 11월3일 미군정 포고령 제22호에 의하여 남면은 과주군에 편입되었다가 지리, 교통 및 제반사항에 큰 불편을 느낀 민민의 요구로 1946년 2월 5일 양주군에 편입되었다. 1980년 1월 10일 19개 행정리로 분리되었으며 1981년 6월13일 면 청사를 신산리 346번지에서 현 위치(신산리 268-9)로 이전하였다.

5. 광적면

세대 3,713의 인구 11,133명 규모의 면으로서 면적은 48.46km² 이다. 15개 리와 86개 반이 행정구역이며 45개 자연부락과 인구100인 이상 ~ 200인 이하의 13개 부락이 형성되어 있다.

양주군 문화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조영무별묘, 송추 골프장, 최제·최혁 효자 정문, 빗설 바위 등의 관광지가 있다.

6. 백석면

원래 방동, 산성, 대오산, 상가업, 내동, 난곡, 내고령, 마장, 고릉, 흥복, 소오산, 기곡, 흥동, 연평, 중산, 대고령, 능내, 신지, 하가업, 단촌, 천죽, 해유, 용자의 23개 리를 관할하였으며, 1914년 4월의 면폐합으로 광석면의 일패리

일부가 방성리, 광석면 일패리, 이패리 각 일부가 오산리, 파주군 광탄면 마장리, 고양군 신혈면 벽제리 각 일부가 영장리로 되어 백석면에 편입되었다. 이 때 방성, 오산, 홍죽, 연곡, 영장, 기산, 가업, 복지의 8개 리로 개편되었다.

1955년 12월 오산리 68번지로부터 532번지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1961년 리직제상 1월4일 21개 리로 분리되었다가 1961년 7월 8개 리로 환원되었으며 1963년 3월 23개 리로 분리되었다가 1965년 11월 9개 리로 통합되고 1980년 1월4일 20개 리로 다시 분리되었다.

1983년 2월15일 기산, 영장 4개 리가 파주군으로 이속되었고 1987년 1월1일, 기산리 일부가 다시 환원됨에 따라 17개 리가 되었고 1990년 1월1일, 방성2리가 분할되어 총 18개 리로 증설되었으며 1993년 6월1일 오산 2리를 오산 2리와 오산 4리로 분리함으로서 총 19개 리가 되었다.

7. 장흥면

원래 울대, 부곡하리, 석현, 이패하리, 삼패하리, 부곡상리, 교현, 이패상리, 삼패하리의 9개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3월1일 부령 제111호로 고양군 신혈면 선유동 일부를 삼하리에 병합하여 부곡, 일영, 삼하, 삼상, 교현, 석현의 7개리로 개편하였다. 면청사 및 지서청사는 교현리에 있다가 1937년 7월 30일 면의 중앙지대인 일영리에 신축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0년 1월 25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11개 리로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교현리, 울대리, 부곡리를 내서산면, 석현리, 일영리, 삼상리, 삼하리를 이서산면 이라 칭하다가 1914. 3.1 부령 제111호로 양개면을 통합하

여 장흥면이라 개칭하고 7개 리로 관할하였다.

1937년 7월 30일, 면 청사를 교현리에서 일영리 현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1980년 1월 25일 행정구역을 7개 리에서 11개 리로 개편하였고 1989년 12월 23일 현 청사를 3층으로 증축하였다.

지역특성은 다음과 같다. 서울 인접지역에 위치(교외선, 국도 39호선)해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이용계획이 전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이 46.24km²(73.3%)에 달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전지역(부곡, 일영, 석현리 일부제외)에 걸쳐 있으며 도시근교 위락지로서 장흥 국민관광단지, 송추·일영 유원지가 있다. 또한 수도권 방위지역으로서 72사단 외 10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